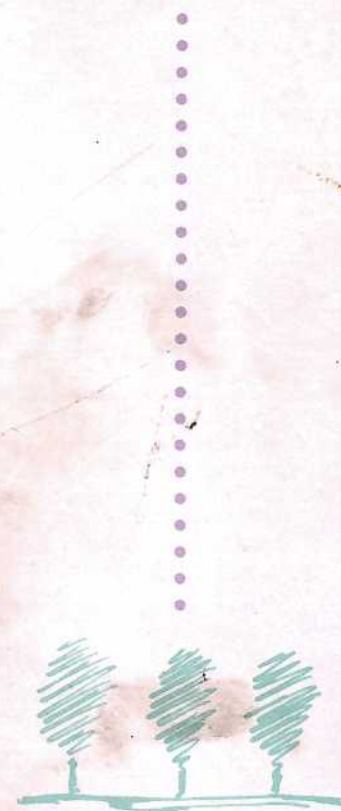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하루소식

합본 II 호
(제101호~200호)



1994. 10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하루소식

합본 II 호 1994. 10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3년 6월

(제175호 - 제195호)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정치·종교·법조·문화계 등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 포스터제작등 초청추진위 막바지 작업 박차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한국방문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5월 31일 현재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박형규·송월주·홍성우)에는 주관단체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5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후원단체로는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18 광주항

쟁 14주년 행사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등이 참여하고 있다. 초청인단으로는 정치계에서 강신욱·이철·신계륜·원혜영·이부영(이상 국회의원), 이창복·김근태·윤영규(이상 재야) 등이, 문화계에서 백낙청(문학평론가)·현기영(소설가)·도종환(시인)·정태춘(가수)·박재동(화백) 등이 함께하며, 법조계에서는 박용일·윤기원·최은순·배금자(이상 변호사), 종교계에서는 오용호·장용주(이상 신부)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는 행사 포스터 제작을 끝내고, 2일 자료집 발간등 행사준비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성상담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 3일 '여성상담심포지움'

오는 11일로 창립 11년을 맞은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여성의 전화)는 그간의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상담 이론을 정립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3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관 4층 중강당에서 열리는 '여성상담 심포지움'은 여성상담이론과 전문상담기관이 거의 없던 시피한 우리나라에서 여성상담이론을 공식 심포지움을 준비해온 정춘숙간사는 "여성상담을 여성개인의 문제로 보는

잘못된 시각을 벗어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여성상담은 여성중심적,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번 심포지움은 여성상담을 공개적으로 이문화해 내는 첫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변 신임회장에 고영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정기총회를 열고 기존의 간사체제 대신 회장제를 도입, 고영구 변호사(57)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하는등 임원진을 개편하였다. 민변은 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변론을 맡았던 이석태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획·변론·출판·회원·대의협력·대변인에 이기욱·유선영·박성호·윤기원·이덕우·박인제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였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5월광장 어머니회'는 아르헨티나 군부에 납치된 자식들을 찾기 위해 하얀 머릿수건을 쓰고 '5월광장'을 돌던 몇몇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치하의 민주화 투쟁의 도화선이었으며, 이제는 UN 인권위원회 안건을 바꿀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초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초청인단에 초청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들은 행사에 소요될 비용 중 5만원 이상 내주셔야 합니다(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3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단체의 경우 후원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계좌번호: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23년동안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해오다 지난 1월 16일 남편을 살해, 구속기소된 이순심씨 증인신문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인권하루소식」 5월분 총목차(156호-17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5/3	156	1	전교조등 전국에서 '어린이 큰잔치' 마당, 어린이 날 올바른 어린이 문화 정착위해/ '94년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위해 노력', 104회 노동절 행사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려			
		2/3	「인권하루소식」 4월분 총목차(135호-155호)			
5/4	157	1	돈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등, 진상규명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 4일만에 1만여명 참가 자보 노조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촉구 14일째 단식농성/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 촉구, 전교조 농촌교육의 정상화 대책마련등 시급/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 개정의견 제출			
		2	보편적 가치를 확대하는 '세계화'를 추구해야, 인권운동사랑방 '국제정보브리핑' 모임/ 60여년간 사용한 윈진레이온 기계 중국수출, 기계수출과 함께 직업병공장도 수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요내용, 형사소송절차-장애아동의 권리등 규정, 정부 94년안에 최초보고서 낼 예정			
5/6	158	1	일본교과서에 '정신대' 범죄 명기요구, 4일 정대협 117번째 수요시위에서 진상조사 및 추모비 건립도/ 전해투 요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기아특수강 50m높이 굴뚝 절거 '부당해고 철회'/ 아-태지역 AI회의, 7.28-31 북경여성대회등 논의			
		2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공청회, 9일 5시 기독교회관/ 미국의 인권문제 관심은 표현의 자유와 여성의 권리/ 단체인행물			
5/7	159	1	해고노동자 104명 장기기증, 전해투 노동절 104주년 맞아 소외받는 사람과 고통나누기 위해,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주장 22일째 단식중/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 규 마련등 사회적 관심 필요, 여성의 전화등 가정의 해 맞아 가정폭력 추방캠페인			
		2	단체담방 19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인권의 바다를 향해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5/10	160	1	'부정비리 고발은 보호-장려되어야', 군-경대책위등 공청회 내부고발은 부정비리 척결의 고리, 양심선언 보호입법은 민주주의의 시작			
		2	전해투 단식농성 25일째 건강상태 극도악화, 병원치료 거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강조, '양심세력의 지지와 격려' 호소/ 광주민주항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 5월 17일 국제심포지움 개최 망월동 기념 돌담쌓기도/ 일법무상 '중군위안부는 공창', 정대협 해임요구/ 윈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원진노동자의 불행을 중국에까지 수출할 수 없다'			
5/11	161	1	"만삭일 때도 구타" 남편친구 증언,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공판 아들도 나와 정상참작 호소 / 컴퓨터통신 관련 김형렬씨,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성인여성부터 아동에 이르는 구타실상 사진전, 가정폭력 추방주간(6-13일) 12-5시 탐골공원앞			
		2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두밀리분교 재판 2차공판, 교육감 '판결에 따르겠다'/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입법례			
5/12	162	1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등 고소-고발, 17일은 전국에서 고발 14일 광주항쟁 제20명 학술대회도(2면에 계속)/ 원진노동자 재취업대책 갈팡질팡, 2기 지하철에 '수백명 채용'에서 17명으로 후퇴			
		2	전해투 10일 해고자 복직 바상결의대회, '자기희생적 투쟁에서 적극적인 원상회복 투쟁으로 전환'/ 10일 김삼식-김은주씨 항소심 1차공판, 한총련 반국가단체 여부 가리기 위해 김대중씨 증인채택 요구, 재판부 '더 검토해 보겠다'			
5/13	163	1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체', 12일 민가협 목요일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가정폭력방지법 추진 '전국연대' 결성,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되어야(2면에 계속)			
		2	김기웅씨 11일 복직, '국민 인권보장에 최대한 노력'/ 사형집행 폐지요구 사실상 거절, 법무부 AI 한국지부 청원에 답변 국제인권소식-'남아공 선거는 인류양심의 승리'/ 사회개발 정상회담 준비 민간단체 회의열려, 인권대회 공대위 대표참가/ PP21 조정단체 확대회의의 'PP21 제구성 필요'			
5/14	164	1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가정폭력은 남성-폭력문화 등 사회환경과 연관(2면에 계속)/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13일 희망새 첫공판, '약혼녀 구속위협, 남과간첩 인정할 것 강요' 밝혀			
		2	광주항쟁 계승위 전-노씨등 35명 고소-고발, 13일 615명 범국민적 고발운동의 시작/ 양심선언 이우형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조성만열사 6주기 추모행사, 14일 5시 명동성당 추모제/ 불교인권상에 정해숙-서준식씨 수상/ 민주법연 4대회장에 박홍규교수 선출/ 단체인행물			
5/17	165	1	노총 "노총에 대한 '폭력적 공세' 선전-폭로"등 결의, 전해투 "폭력행사자의 적반하장", "노총해체" 주장/ '김준기회장 퇴진, 한국자보노조 인정' 요구, 시민연대 2차 고발장 접수 1만3천40명 시민서명/ 529명 석탄일 가식방, 행정성적-복역기간등 '종합적 고려'			

「인권하루소식」 5월분 총목차(155호-174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5/17	165	2	광주항쟁 학술대회 '광주항쟁은 개혁추동의 원동력', 광주항쟁 계승위 진상규명 특별법, 특별검사제 요구/ 두밀리분교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두밀리주민 '이해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광주민주항쟁 기념문화제, 창작판소리 '5월광주', 5월심리극 '모란꽃', 18-22일 문예회관 대극장 윈진직업병 환자 또 10명 발생, 울들어 42명 발생 지금까지 모두 359명 사망 16명/ 과잉진압 사망 김귀정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고 김광삼씨 49재, 오늘 꽃동네 묘역/ 한-일 보육운동의 현실과 발전방향 모색, 오늘 2시 종로성당/ 윤금이 살해범 마를, 천안교도소에 수감			
5/19	166	1	단체담방 20 /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과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연대			
		2	정부, A규약 최초보고서 '몰래' 제출, 민간단체 공개요청에 '유엔문서로 공개하겠다'며 공개연기, '반박보고서 작성방해' 의혹 '당연히 공개해야'/ '직업병의 상징' 윈진기계 이달부터, 윈진비대위 '돈 몇푼에 살인기계를 파는 것', "지구상에 또 다른 '윈진' 직업병 환자 허용 못한다"/ 노-경총 임금협의 철회요구, 전해투 '노총폭력 사과'			
5/20	167	1	19일 고 김광삼씨 49재/ '보육은 남여 공동의 문제이다', 보육운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2	국제인권소식-미국 인권단체 반아파트헤이트 운동에서 버마 인권상황 위한 활동 본격화/ 아시아워치, 중국인권보고서 발표, MFN 논의하는 미 의회에 제출			
5/21	168	1	삼청교육대 피해자 진상규명 및 배상요구, 6월부터 '피해자 전원 집단소송' 밝혀/ 부산 불교사회학교 개설, 5월 31일-6월 28일/ 윤상원상 수상자, 정광환씨-극단 토박이/ 병역특례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요구, 전해투 병무청도 방문			
		2	단체담방 21 /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5/24	169	1	동티모르관련 민간단체회의의 무산위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수단의 압력, 필리핀 동티모르 관련 민간회의에 외국인 참가거부/ 부부관계의 중심축은 여전히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여성민우회 가족실태조사 결과(2면에 계속)			
		2	전해투-윈진비대위 공동투쟁, 한국노총 폭력사과, 윈진노동자 재취업 요구/ 윈진기계 약64억원에 매도, 윈진비대위 수입철회 촉구/ 김귀정 추모사업회 발족, 평전발간-장학기금 마련/ 전해투, 탄원서 제출, '정치적 희생 치유, 생존권보장'/ 검찰, 조계사 폭력 고발인 1천9백여명에 질문서 발송/ '법률구조제도 개선등으로 당직변호사제도 활성화 필요', 당직변호사 1년 토론회			
5/25	170	1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황석영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5.18 진상규명 위한 국제연대모임 가동/ 고 김의기-김세진씨 추모, 고난 5월 월례기도회/ 『인권선교 20년사』 발간, 한교협, 증언-사진등 모집/ 단체인행물			
		2	출소장기수는 괴롭다, 청량리경찰서 관광여행에 회합금지 '조치서'/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이세균씨에 대한) 조치서			
5/26	171	1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6월 7일 한국방문,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 문제등 토론회/ 전교조 창립50주년 행사 29일 1시 동국대, '학교개혁-정부재정 투자확대' 제기/ 여성의원들의 지방자치 3년 활동 평가토론회, 27일 2시 30분 기독교연합회관			
		2	두밀리분교 폐교반대 주민들, '두밀리분교 후원회원 모집'/ 신장호씨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동티모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거부 방침에도 예정대로 개최/ 신임 한교협 인권위원장에게 김상근목사/ '희망새' 석방위한 서명-모금 사업진행			
5/27	172	1	두밀리분교 폐교는 농촌해체 가속화의 상징, 가평군 행정관서 폐교철회운동에 부당한 압력행사, 밤중에 전화-이장에 사퇴압력/ 목적수행등 무죄판결 탄원, 김삼식-김은주 공판/ 안기부 고문사례 증언, 26일 민가협 목요일집회			
		2	국제인권소식-독일, '장애인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중국-미국간의 인권공방중 밝혀진 대만의 인권침해/ 이집트 이슬람근본주의자에 테러, 93년 이후 경찰구금중 사망 16명/ 사형선고와 옥인에 대한 인종차별 관계논란, 미국 마약관련 기소자의 75%가 백인, 36명의 사형자중 흑인 28명			
5/28	173	1	인권이사회 3차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준규씨에 첫 '통보' 허용, 국제인권법 기준미달인 국내법규 개혁제기(2면에 계속)/ 조용환 변호사 동티모르 국제회의의 참가위해 출국			
		2	대법원 판결, '시대 역행하는 태도', 황석영 석방대책위등 문화예술계 성명/ 제2기 모니터 교육, 5월 31일-6월 23일/ 민가협, 한총련 출범식 참가/ 해고-원진노동자, 한국자보 문제해결 촉구, 각계인사 54명/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5/31	174	1	두밀리분교학생 마을회관 자체교육 계속하기로, 두밀리주민 교육장등 면담 한밤중 전화등 중지요구, 학부모회의 폐교철회등 제정-후원 조직방침/ 한국자보노조, 단식농성 일시중지, 노시대화제의 노동부 '해고자 복직위해 노력' 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민교협등 22개단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탄원서 제출, 대한변협, 12-12, 5-18 신속수사 촉구/ 전교조 창립5주년 교사대회, 5% 교육재정 확보등 요구/ 단체인행물			
		2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연대투쟁으로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 다짐

전노대 결의대회 제3차 개입금지·구속수배에 공동대응키로

전노대 발족 1주년 기념 및 94년 임투 승리와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를 위한 전노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가 1일 오후 2시 2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힘차게 열렸다.

이갑용(전노대 공동대표, 현총련의장)씨는 대회사에서 “김영삼정권은 긴급조정권과 제3차 개입금지 조항을 이용,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노대는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민주노총을 힘차게 건설해 나가자”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구속·수배·해고 등지들의 복직은 단위노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노협 사무총장)씨는 “현재 노사간의 임금교섭이 전국적으로 50% 진행되었고 이중 15%가 타결되었으며, 그 결과 임금인상률은 15%로 나타났다. 이는 노·경총이 말한 임금상률 5.6%를 무력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노대는 6월 10일 기준으로 쟁의 발생 신고를 집중시키면서 긴급조정권·제3차개입금지, 노동자 구속수배해제 등에 공동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뒤이어 변형근로제 아래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철도노동자를 대표해 지하철도조정책실장 임선규씨의 투쟁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로 진행되었다.

지난 5월 31일로 철야농성 1년을 맞은 전해투의 조준호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전해투의 성과는 노동자해고방지 효과를 들 수 있다. 전해투는 노·경총 임금합의 분쇄와 민주노총 건설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스노·경총 임금이드 라인 분쇄 △임투시 해당사업자의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철도노동자들과의 지원·연대 △제3차 개입조항의 적용, 직권 및 일방중재, 긴급조정, 경찰력 투입 등 제반 탄압에 전면적으로 공동투쟁할 것 등을 다짐했다. 집회를 마친 뒤 오후 3시 55분경 전해투를 비롯한

전노대 소속 노동자 1백여명은 럭키빌딩 쌍둥이빌딩 앞에서 지난 5월 20일 회사측의 폭력만행에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현재 럭키빌딩 해고노동자는 53명인데, 회사측은 지난 20일 관리자 2백여명을 동원해 텐트농성을 벌이고 있던 해고노동자 4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머리가 쪼개는 등 크게 부상을 입었고 1일 현재 2명의 해고노동자가 사당의원에 입원중이다.

ILO총회에 전노대 파견 2명 고문단 자격으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공동대표 권영길·양규현·이갑용·최은석) 소속 「전문노련」 박대주위원장과 「건설노련」 배석범위원장은 7일부터 시작되는 제81차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 고문단 자격으로 참석차 5일 출국한다. 이밖에 ILO총회 한국대표단으로는 노동부 강봉균차관,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하며, 근로자대표 고문으로는 한국노총의 원정연 홍보실장, 김성진 국제부장이 참석한다.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향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향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희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김국홍·함세환노인 조건없는 송환 요구

1일 송환추진본부 가족 편지도 공개

작년 6월 2일 구성된 ‘김국홍(본명 김인서)·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는 1일 두 사람에 대한 송환에 정부당국의 적극적 자세를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호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 사무처장은 올해 안으로 조계종 사찰의 땅을 기증받아 나눔의 집을 착공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공판 2일 열려

고 박창수씨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및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1차 공판이 2일 11시에 서울지법 55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족 및 노조가 지난 5월 3일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 박창수씨의 사망은 △안기부가 전노협과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회의를 탈퇴하도록 공작하는 과정에서 야기되었으며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의 감호업무

소홀로 발생했으며, 또한 △검찰과 경찰의 시신탈취 및 일방적인 부검 실시 △검찰등 수사기관이 진상조사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박창수씨는 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으며, 91년 2월 제3차개입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 5월 4일 10:00경 이마에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월 6일 04:45경 병원 마당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5월 7일 05:00경 강제로 시신을 탈취, 부검하였다.

알림

- 변형근로제 철폐와 '94임투 승리를 위한 전지협 공동투쟁 결의대회
 - 일시 : 6월 2일(목) 10:30 / 장소 : 종로3가 종묘공원
 - 주최 :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 민가협 37차 목요일집회
 - 구속 노동자 석방 촉구
 - 일시 : 6월 2일(목) 오후 5시 / 장소 : 탑골공원
 - 출연 : 권처홍씨, 서동석(기아차 해고자)등
- 박래전열사 추모식 및 추모비 제막식
 - 일시 : 6월 3일(금) 오후 4시 / 장소 : 송실대 민주계단
 - 주최 : 박래전추모사업회
-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적이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
 - 전화 : 322-4501/2 · 팩스 : 322-4053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 한국방문 일정

6월 7일(화) 오후 2시	“5월 광장 어머니회 방한 기자회견” 주최 : 초청 추진위 장소 : 김포공항
6월 7일(화) 오후 6:00-8:30	“5월 광장 어머니회 환영모임” 주최 : 초청 추진위 장소 : 기독교 백주년기념관 그릴
6월 8일(수) 오후 6:30-8:30	“평화를 위해 싸워온 5월 광장 어머니회 20년” -초청강연회, 비디오 상영, 사진 전시 주최 : 초청 추진위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6월 9일(목) 오후 6:30-9:00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민가협 목요일집회” 주최 : 민가협 장소 : 명동성당
6월 10일(금) 오후 7시	“과거청산,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아르헨티나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전략”-전문가와 활동가를 위한 워크샵 주최 : 초청 추진위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6월 11일(토) 오후 3시	“민속민주열사 범국민 합동추모제” 주최 : 전국연합 장소 : 한양대학교 노천극장
6월 12-13일	“광주행사” - 망월동 묘역 참배, 유족들과의 만남, 대중강연회, 지역언론 인터뷰
6월 15일(수) 오후 3:00-6:00	<한국-아르헨티나 공동 심포지움> “인권침해 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 문제-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주최 : 대한변협 장소 : 대한변협 강당
6월 16일(목) 10:00-14:00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참배” 주최 : 초청 추진위 장소 : 마석 모란공원
6월 17일(금) 오후 6-9시	<문화화마당> “희망과 연대의 시작:한국-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밤”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초청 추진위 장소 : 조계사 불교회관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5월광장 어머니회’는 아르헨티나 군부에 납치된 자식들을 찾기 위해 하얀 머릿수건을 쓰고 ‘5월광장’을 돌던 몇몇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치하의 민주화 투쟁의 도화선이었으며, 이제는 UN 인권위원회 간건을 바꿀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초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초청인단에 초청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들은 행사에 소요될 비용 중 5만원 이상 내주셔야 합니다(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3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단체의 경우 후원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계좌번호 :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

필리핀 케손시 국립대학에서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회의'가 라모스대통령의 불허방침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중인 조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부인과 포르투갈 대통령 부인, 조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저항운동평의회 공동의장등의 입국을 금지하였으며, 현지에도 착한 동티모르 독립운동 관련자를 포함한 10여명을 추방하였다.

외국인 7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40여명이 회의에 참석중이며, 필리핀의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케손시의 지방법원은 대회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내국인의 참가는 합법, 외국인 참여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같은 필리핀의 강경대응은 동티모르문제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필리핀의 하이메 신 추기경은 정부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하였다.

'한국인권협', 20일 창립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인권협)가 오는 20일 오후6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다. 인권협은 '유엔세계인권대

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성과를 계승하고 인권단체간의 연대와 협력증진, 국내의 인권신장을 위해 출범케 된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다. 이 중 '민변'이 상임대표를, '인권운동사랑방'이 간사단체를 맡아 1년동안 활동을 벌인다.

창립대회에는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

원장)씨가 '인권운동의 나아갈 길'의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여성상담심포지움 마련
3일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여성의 전화)는 여성상담 심포지움을 3일 오전11시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에서 갖는다. 여성의 전화 상담회원과 상담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김영애(서강대 강사)씨가 '여성 중심상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을, 박애선(숙대 강사)씨가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정체성 발달에 관한 일 연구'를 발표한다. 오후시간에는 윤종모(성공회 신학대 교수)씨가 '성차별 문화와 종교적 관점에서 본 여성상담'을, 김명희(여성의 전화 전문상담원)씨가 '여성성과 남성성 원리에 의한 상담'을 발표한다. 회비 1만원. 문의:269-2962

고박창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10시 속행

90년 5월 6일 양양병원 마당에서 시체로 발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자살'로 간주된 고 박창수(당시 30세)씨 사망사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공판이 2일 오전11시 서울민사지법 합의 13부(재판장 조흥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대리인, 피고대리인측의 증거 제출·신청 등이 있었으며, 다음 공판은 23일 오전10시 559호 법정이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5월광장 어머니회'는 아르헨티나 군부에 납치된 자식들을 찾기 위해 하얀 머릿수건을 쓰고 '5월광장'을 돌던 몇몇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치하의 민주화 투쟁의 도화선이었으며, 이제는 UN 인권위원회 안건을 바꿀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단체입니다.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초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초청인단에 초청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단은 행사에 소요될 비용 중 5만원 이상 내주셔야 합니다(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3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단체의 경우 후원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계좌번호: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국제인권소식

아시아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 - 아시아 핫-라인 긴급호소 스리랑카 4년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31명의 학생

편집자주다음은 홍콩에 있는 아시아민족발전센터(ACPP)의 인권보호 프로그램의 하나인 핫-라인 긴급호소(Urgent Appeal)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많은 독자들이 이 호소문에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2월 방콕에서 열린 아태지역 인권단체 모임에서는 아시아 각 나라의 인권침해사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ACPP의 핫-라인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학생 31명 유괴, 강제 실종
스리랑카 (HL/ACPP 940519(7))

사건의 개요

94년 1월, 약 3백명의 시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3개의 대형묘지가 스리랑카 남부 라트나푸라지역의 콜론에 있는 수리야칸다산에서 발견되었다. 시체의 일부는 89년 12월 엠빌피차에 주둔한 군대에 의해 채포되었던 어린 학생들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체들은 89년 정부가 싱할리족을 주축으로 한 반정부게릴라조직인 Janata Vimukthi Peramuna (JVP)에 대한 특별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살해된 것들이다. 88년부터 90년까지 3년간 스리랑카 남부에서는 수천명이 실종되었다. 그리고 88년과 89년 농촌 무적 청년들의 봉기가 있었고 이는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적격단을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자를 살해했으며 89년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잔인한 살해와 실종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사건의 배경

89년 12월, 라트나푸라지역의 엠빌피차 출신 학생 48명이 스리랑카군 제6포병대에 의해 체포되어 세바나수용소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31명 학생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부모들에게 자녀의 소재에 대해 전혀 알려주지를 않고 있다.

증언에 따르면 구속학생의 명단은 지역 학교의 교장과 나중에 군에 입대한 교장의 아들에 의해 군 당국에 제공되었다고 한다. 이 두 제공자는 개인적 악의와 학교에서 잠재적인 JVP 지지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구속대상 명단 제출을 요청한 지역 정부당국이나 정치인의 요청에 협력하기 위해서 행동했다고 알려졌다.

한 구속학생의 아버지는 교장을 만났는데 자기 아들이 세바나 수용소에 있음을 교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수용소의 책임자는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89년 10월 15일, 그 구속학생 아버지는 군인들에 의해 연행되어 네바나 수용소로 끌려갔다. 물론 군인들은 교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다. 이 수용소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러명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들 중 세명은 그가 이미 알거나 알아볼 수 있는 아들의 친구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은 계속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으나 이후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이들 모두가 육체적인 고문을 당했으며 그 자신도 심문을 당했는데 구두로 자신이 JVP에 관련되었다고 자백할 때까지 약 2개월 넘게 여러번 고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풀려났다.

은퇴한 전 대법원 판사이자 현재 인권전담반(Human Rights Task Force)의 의장인 저스티스 수자(Justice Souza)씨는 18개월 전에 이 대량학살 및 유괴사건과 관련하여 10명의 군인, 교장과 그의 둘째 아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힌 보고서를 스리랑카 정부에 제출하였다. 심문과정에서 2-3명의 학생들이 심한 고문때문에 죽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목격자를 없애려는 의도에 따라 살해되었다.

요청되는 실천행동 :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요 요구사항

1. 스리랑카 정부는 대량학살 사건을 조사할 독립적이고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한다.
2. 이 학살사건에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3. 어린 학생들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정부는 공식적인 자료로 발간한다.
4. 정부는 이러한 대량 인권침해사건이 정부 보안군에 의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의 내용을 요구하는 편지나 팩스를 아래의 주소로 보낸다.

1. His Excellency D.B. Wijetunga, President, Presidential Secretariat, Republic Square, Colombo 1, Sri Lanka
2. A.W. Fernando, Secretary, Ministry of Defence, Republic Square, Colombo 2, Sri Lanka
3. D.L.F. Pedris 주한대사, 110-714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스리랑카 대사관, 전화: 735-2966 / 팩스: 737-9577

항의 편지의 예: 아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지는 마세요!!!

I/We express my/our deep concern about the apparent abduction and execution of 31 school-boys from the school at Embilipitiya in December 1989.

I/We kindly request the Sri Lankan government to appoint an independent and important inquiry into the extra-judicial killing of innocent school boys and bring to justice all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this massacre. The government should officially publish what had happened to these children. It is important that the government ensure that such a massive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the security forces does not happen again.

영어로 편지를 쓰는데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분에게는 국제엠네스티 한국기부에서 작성한 4쪽의 안내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주저-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인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추천기구 통해 국민의견 반영해야’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오는 7월로 예정된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3일 발표한 ‘새 대법관 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관 추천기구의 구성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하였다.

민변은 성명에서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은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청렴한 생활과 겸허한 행동으로 국민과 법조계의 존경을 받으며, 소신과 용기로 사법권의 독립에 헌신한 사람으로 사회발전에 적응할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진취적인 사람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대법관의 임명은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기구를 구성하여 국민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변은 “국회등이 요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추천절차나 청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민청문회 개최를 구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대법관 추천기구 구성, 인사청문회 개최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가능하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국회법 등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7일, 5월광장어머니회도학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기독교백주년 기념관

7일 오후 1시30분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소속 회원과 아르헨티나 인권변호사가 우리나라를 찾아온다. 11일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이들은 인권변호사 에ктор 놀리(Hector Noli)와 어머니 후아나 멜레 데 빠르가멘(Juana Meller De Pergament), 아우로라 몰리나 데 프라카롤리(Aurora Molina De Fraccarolli)이다. 오후 2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들은 공항로비에서 환영행사와 간략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오후5시 종로5가 기독교백주년 기념관 그릴에서 정식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6시부터는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의 3인)에서 마련한 5월광장 어머니회 환영모임에

같이 할 예정이다.

‘희망세’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

지난 1일 오전10시 노래극단 「희망세」 첫 공판이 부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수열판사) 심리로 열렸다. 피고 허명순씨 등은 “희망세 단원이 작품의 창작자가 아닐 뿐더러 북한을 찬양·동조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희망세」 활동이 김일성사상에 대한 동조·찬양 목적이 있다고 판단, 허명순씨에게 징역2년 자격정지 2년, 최경아·안성혜씨에게 징역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5일이다.

8일은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은 고문의 심각성을 알리고 고문피해 동문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8일 연세대학교에서 ‘고문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행사를 벌인다. 총여학생회·정의과학회 등이 함께하는 이날 행사는 1인 1천원 내기운동, 문국진(철학과 79)·김복영(정의과 84)씨에게 격려엽서쓰기, 청와대에 탄원엽서 보내기 운동을 비롯해 일일주점등 다양하게 벌어진다.

문씨는 다산·보임사건으로, 김씨는 86년 시위도중 연행·구속되어 경찰의 가혹한 수사과정에서 발병, 문씨는 5차례, 김씨는 8차례의 정신병 치료를 받아왔다.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5월광장 어머니회’는 아르헨티나 군부에 납치된 자식들을 찾기 위해 허안 머릿수건을 쓰고 ‘5월광장’을 돌던 몇몇 어머니들로부터 시작된 단체입니다.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초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약 200여명으로 구성되는 초청인단에 초청인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들은 행사에 소요될 비용 중 5만원 이상 내주셔야 합니다(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3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단체의 경우 후원단체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796-8364 팩스 796-8366
·계좌번호 :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단체탐방 22 / 한국여성민우회

민우(民友)라는 말에 우선 호기심이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묻는다고 하는데 여성운동의 역사의 맥, 일제시대의 여성근우회, 80년대 초의 여성평우회의 맥을 잇는다는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해석해본다면 여성민중들이 서로를 벗으로 섬기며 일을 도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각계각층을 다 포괄하여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했지만 여

성단체들이 각기 전문영역을 가지게 되면서 여성민우회도 사무직여성과 주부를 주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87년 9월 12일에 창립하여 현재 회원 2천여명, 5개의 지역협의회를 거느린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3인의 공동대표(이경숙, 정강자, 이금라)와 4개부서 16명의 상근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협의회의 일꾼을 합치면 실무자가 20여명에 이른다.

민우회의 회원들은 “스스로 서는 여성입니다. 생활과 일터의 주인입니다. 환경을 생각합니다. 세시대를 열어갑니다”는 선언을 당당히 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째, 스스로 서기 위해 자기개발과 사회적 실천을 쉬지않고 고민한다. 때론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때론 목청껏 노래도 부르고 세상이 깨져라하고 풍물도 친다. 지역자치와 주민운동에 간을 하고 양념을 치는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이나 여성의 권리를 가계부에 기록해 가듯 꿈꾸어 행기는 ‘여성인권모임’ 등이 있다.

둘째, 생활협동사업과 지역사업이 있다. 환경보호가 있고 나누는 공동체가 있고 민우회에 세상을 붙이는 조직화가 있는 사업이다. 생협은 단순히 좋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서서 저공해·무농약 생활물자를 함께 나누며 건강과 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5가구 이상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형성해야 ‘나눔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형성을 위한 촉매가 된다. 이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물론공급요일에 맞춰 생활을 함께 계획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임을 가지고 민우회의 교육·문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41개의 공동체를 가진 노원-도봉 지역협의회, 38개의 공동체를 가진 서대문-은평지역협의회 등 지역조직이 공동체의 성장을 돕는다. 간판 뿐인 많은 지역조직들과는 대조적으로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림이 꾸러지고 보람이 붙어가는

가정·일터·지역사회에서

평등세상 만들기 위한 촉매제 역할

지역협의회라 할 수 있다.

셋째, ‘평등한 노동 신나는 평생일터’를 위해 달려가는 노력들이다. 여성취업에서 사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가고 있고 그에 따라 직장에서의 ‘꽃’의 이미지보다는 당당한 ‘일꾼’으로서 있다. 그래서 사무직 여성부에서는 차별임금의 개선과 임시고용 및 신인사제도 등에 대한 연구, 노동조합내 여성부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과 연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92년 8월 일본을 방문하여 ‘신인사제도, 고용문제, 성폭력 문제’를 주제로 일본여성단체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노조등을 방문한 경험속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느꼈고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노동정책을 고려해 볼 때 앞서간 일본의 문제들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예방 진단해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런 활동의 성과들은 기간 ‘사무직여성’으로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다. ‘사무직여성’은 90년 부터 발간되어 현재 15호가 나와있다. 성차별뿐 아니라 직장내 성폭력 문제 또한 심각한데 최근 우조교 성희롱사건 해결을 위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에 참여하면서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일상활동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올 하반기에는 성희롱에 대한 책을 발간할 예정이고 노동·성·가족문제 등 여성문제 전반에 관한 상담소를 연말 개소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가정, 일터, 지역사회에서 민우회의 당찬 살림살이

는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 『실천하는 여성, 힘찬 노동조합』, 『사무직 여성과 임금』, 『임시고용과 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 『작은 플에도 이름 있으니』(90년 제작한 16mm영화), 『엄마의 세상지혜는 몽땅 네것이란다』등 수십권의 책자로 정리되어 있다. 민우회의 세상사는 지혜를 알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민우회에서 이런 자료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박래전열사’ 추모식 6일 마석모란공원 참배

송실대 총학생회등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를 ‘박래전열사 추모기간’으로 정해 3일 송실대 교정에서 추모식을 비롯해 ‘동화노래한마당’, 기념비제작 등을 가졌다. 또 6일 정오에는 마석모란공원에서 추모제를 갖고 민주열사묘역도 참배할 예정이다.

6일 출발은 오전 10시 송실대교정문의 820-0970

양심선언 전경 이우형씨 징역3년 집3년 선고

90년 10월 전경대 해체를 요구하는 양심선언후 3년5개월동안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3월 구속된 이우형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성남지원 합의부(재판장 부장판사 손평섭)는 3일 이우형씨에게 징역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이씨를 석방하였다.

◆ 알 림 ◆

- 두일분교 폐교철회 소송
·일시 : 5월 7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고법 413호
-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완전쟁취와 원진레이온 노동자 재취업 및 어용노동·경찰 폭력만행 규탄 제2차 결의대회
·일시 : 6월 4일(토) 오후 2시 / 장소 : 명동성당
·주최 : 전해투, 원진비대위
*6시 30분에 여의도백화점 앞에서 어용노동 항의·규탄대회가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9호는 6월 8일(수)에 발행합니다.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죽어간 자녀들의 고통을 불행한 역사단절의 밑거름으로

7일 '오월광장 어머니' 한국방문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인권침해자 처벌 위한 국제연대활동의 연장선"

'오월광장 어머니' 한국방문

3만명의 실종된 자식들을 찾아 군부독재와 17년간 싸움을 벌여온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들이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홍성우등 4명, 초청추진위원회) 초청으로 우리

나라를 찾아왔다. 7일 오후 1시30분 김포공항에 도착한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5월광장 어머니회) 어머니 2명과 인권변호사는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합니다'는 프랭카드를 들고 마중 나온 민가협·유가협 어머니들과 힘차게 만났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5월광장 어머니회 회원은 후아나 벨레 데 파르가 멘(78, 재정담당)씨와 아우로라 몰리나 데 프라카를리(63, 지부대표)씨, 그리고 인권변호사 엑도르 놀리(50)씨이며, 이들은 60여명의 환영인파에 둘러싸인 채 공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감 기자회견 '고통 나누기 위해 왔다'

5월광장 어머니회를 대표해 후아나씨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고통을 겪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나누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5월광장 어머니회 주최로 지난 3월 27-30일

파리에서 세계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회의가 대규모로 열렸다. 94년 5월광장 어머니회는 국제사회를 통한 외부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점에서 한국방문은 또다른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다.

'자녀의 눈물과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후아나씨는 "우리는 17년이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 자식들은 죽었으나 우리는 자녀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고 있고, 아들·딸들이 간 그 길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고 있다" (2면에 계속)

각계인사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촉구 청원

강문규(대한 YMCA 연맹 사무총장), 이세중(대한변협 회장), 서경석(경실련 사무총장), 송월주(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등을 비롯한 각계인사 12명은 지난 4일 대우정밀, 풍삼금속 등에서 해고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평화를 위해 싸워온 오월광장 어머니회, 20년

초청강연회, 액정비디오 상영 및 사진전시회

- 일시 : 6월 8일(수) 6시 30분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 주최 :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 문의 : 763-2606, 796-8364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만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

--7일, 5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중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후원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청행사에 필요한 약간의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763-2606, 796-8364
·계좌번호 :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장총회 인권위 사형제도폐지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인권위원회'와 '사형제도폐지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제3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가 7.8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명남(총회 사형제도폐지위원장)씨는 인사말을 통해 "사형제도는 세계 인권선인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다. 작년 한해만도 전세계에서 1천8백23명이 집행되었다"며 인간의 생명은 최대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대표공동회장)변호사는 "사형제도는 그 나라의 법문화, 민주화의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전제된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개최예배에서는 임택진 목사가 '인간의 존엄성과 선교'의 주제로 설교를 했고, 주제강연으로 조성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발표했다.

자보노조 간부 5명 세 번째 무기한 단식 선언

노총도 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규탄하기로

지난 5월 28일 노사사태 해결여건 마련을 위한 단식투쟁을 중지하며 한국자보 차보협에 대화를 촉구했던 '한국자보 노조'의 '노조사수 비상대책위'(위원장 김철호 한국자보노조위원장)은 회사측이 "구시대적인 폭압적인 노동관을 노동조합에 관철하려 한다"고 밝히고 7일 김철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다시 들어갔다.

한편 한국노총은 3일 20개 산별연맹 대표자회의를 열어 3차례에 걸친 동부그룹·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규탄대회를 연속적으로 열기로 결의하고, 오는 11일 오후 2시 한국자보빌딩 앞에서 첫번째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동부그룹 산하 한국자보 사건은 93년 2월경 회사측이 노조탈퇴강요에 이어 그해 5월부터 행해진 간부사원 1백7명 부당전직, 퇴직강요, 부당행위 등으로 계속됐다. 그뒤로도 계속

한편 48년부터 93년까지 사형집행된 자는 9백62명(군인 1백6명 포함)으로 집계됐으며 김영삼정부 출범 이후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인 사형집행자 8백57명의 죄명을 보면 살인이 2백15명으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으며 강도살인 1백

노조간부 감금, 폭행, 임금미지급 등 한국자보측의 노조와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노조파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일어난 국회토론회사건으로 물의를 빚어왔다.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죄결의 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 정대협)는 7일 처음으로 일본 외무성 관리를 면담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정대협은 질의서에서 △1·2차 조사보고서에 위안부 문제의 성격, 명령체계 등이 빠져있고 강제성도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단체를 조사단에 포함하여 3차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일본국회에서의 사죄결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배상 및 일본교과서 개정, △국제법에 따른 책임자 처벌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대협 대표단은 지난 6일 오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재판에 참석하였고, 8일에는 일본국회 앞에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1면에서 계속)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 정확히 상황을 인식하고 단합해 싸워야 한다.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만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5월광장 어머니회가 생긴 이후 17년간 아르헨티나의 인권상황이 변화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후아나씨는 "과거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죽거나 실종당하는 자가 있고 억압하는 자가 있다"고 대답한 뒤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한국 국민들이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청추진위·박형규 공동대표 '아르헨티나 어머니의 투쟁 지지'

이에 앞서 박형규(초청추진위원회 공동대표)목사는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우리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여기에 마중 나온 어머니들 중에는 자식을 잃은 이도, 감옥에 들어간 이도 있다.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어 직접 위로는 못했지만 한국과 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투쟁을 서로 지지해 왔다"며 만남의 기쁨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5월광장 어머니회 환영모임'이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그릴에서 이소선여사, 박용길장로 등을 비롯한 민가협·유가협 어머니들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가량 열렸다.

환영행사-백주년 기념과 그릴

송월주(초청추진위 공동대표)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한 환영모임에서 아우로라씨는 "어머니들의 열정과 환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좌절하지 말고 그동안의 고통을 넘어 자식들이 들었던 것발을 높이 들자"고 화답했다. 후아나씨도 "5월광장 어머니회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 비록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적지만 어머니들이 겪었던 경험은 알 수 있다. 치욕된 역사의 단절이 우리 모두의 염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민조 유가협회장, 서경순 민가협상임의장등의 환영사가 따랐다.

◆ 행사 안내 ◆

-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 일시 : 6월 8일(수) 12시-오후 8시
 - 장소 : 연세대 학생회관 주위
 - 주최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연세대 총학생회동
 - 행사내용 : 1인1천원내기 운동/ 주점/ 고문피해자 대책수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촉구 서명/ 문국진·김복영에게 격려서 쓰기
-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병무청 항의방문 및 면담(☎ 784-6037, 8)
 - 일시 : 6월 9일(목) 오후 3시 / 장소 : 중앙병무청 앞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혐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

제대한지 4개월이 지난 민간인을 총기절도혐의로 헌병대에서 연행한 뒤 참고인을 위협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등의 의혹이 인권단체와 가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또 군부대의 총기관리 소홀을 정신장애 4급인 사람에게 떠넘겨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위원장 김종일, 군·경대책위)에 따르면 93년 12월 의가사제대한 김벽창(22)씨가 지난 4월 12일 밤 수도권단 헌병대에 연행된 뒤의 공포분위기에서 총을 훔쳤다는 허위자백 끝에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씨는 4월 22일 가족과의 면회이후 계속 자신의 진술을 번복, 총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과 가족, 군·경대책위 김종일위원장 등을 통해 알려졌다. 또 김씨의 연행에 앞서 4월 3일과 5일에 김씨의 중학교 동기이고 군생활을 같이 한 손아무개씨가 수도권단 헌병대에 연행되어 "벽창이가 총 훔쳤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같이 구속시키겠다"는 위협에 "김벽창이 총을 훔쳤다고 얘기하는 것 들었다"(4월 3일), "김벽창이 총을 가지고 와서 다같이 만져보았다"(4월 5일)고 진술

한 사실이 손씨의 입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편 수도권단 헌병대의

조아무개 수사과장은 지난 5월 27일 군·경대책위 김위원장과 가족과의 면회때 수사초기 김씨에게 구타, 협박, 폭행사실을 시인했다고 군·경대책위 관계자는 8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또 수사초기에 김씨가 "물에 떠 있는 물오리를 맞추기 위해 총을 강물에 버렸다"는 진술을 하였다. (☞ 2면에 계속)

8일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강연회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있다"

'평화를 위해 싸워온 오월광장 어머니회, 20년'이라는 주제의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대중강연회가 8일 저녁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박용길 장로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소설가 윤정모씨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서 후아나(78, 재정담당)씨는 "지구상에 단 한명이라도 고문당하거나, 실종되고, 거리에서 학살되며, 어린이가 성폭행당하거나 혹은 마약과 마피아가 여전한 세상이라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후아나씨는 지난 3월 말 파리에서 열린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모임'에 참가한 각 나라의 경우를 소개하며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 국제연대활동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아우로라(63, 지부대표)씨는 "학살의 책임자는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며, 인권을 유린한 학살자의 처벌을 강조하였다. 또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초대회장이 체포되어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며 어머니회 활동에 대한 탄압상을 소개하면서도 "우리의 투쟁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평생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태열사의 어머니들은 강연회후 오월광장 어머니회 안고 권력형 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더욱 열심히 싸울 것을 다짐하며 오월, 이에 통역사가 눈시울을 적시는 통에 잠시 울음소리만이 강연장에 퍼지기도 했다. '오월광장 초청추진위'(공동대표 박형규등, 초청추진위) 주최로 열린 강연회는 오월광장 어머니회의 투쟁과 활동과정을 담은 비디오 상영, 박용수(한글문화연구원 이사장)씨가 우리나라의 민주화투쟁을 담은 사진첩을 이들에게 증정하기도 했다.

한국-아르헨티나 고난받는 어머니들이 함께 부르는 희망의 노래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38차 민가협 목요집회

- 사회 : 임수경·임종석
- 노래/시낭송/일인극 : 노랏사, 김광석, 신지아, 안치환, 유열/도종환/원창연
- 중언 : 이종환 선생님
- 공동선언 : 5월광장·민가협 어머니
- 일시 : 6월 9일(목) 6시30분-9시
- 장소 : 명동성당
- 주최 : 민가협 / □문의 : 763-2606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우리를 잊는다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손준규)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11일 오후2시 서강대 다산기념관에서 연다. 이 자리에는 오병선(서강대)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민경식(중앙대)교수, 최성재(서울대)교수, 조강환(동아일보)논설위원등이 토론을 벌인다.

지난 2월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원 주도아래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생활보호대

상자들이 매월 받는 6만5천 원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은 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토론회는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부에는 정기총회와 경제·노동·정치·사회, 법률·행정, 복지·주택, 보건·환경 분야별로 '국제화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260-3258).

원진기계 중국수출반대 20개 단체 공동논의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정책을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인도)는 9일 오후2시 전노협회의실에서 환경운동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진보정당추진위원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가칭)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반대투쟁대책위원회 결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의 034-663-3645

문국진·김복영 생각하는 날 "고문피해자 보상" 서명

연세대에서는 8일 '고문피해 동문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행사가 교정 곳곳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연대총학생회 등이 함께만 들었고 각 단마다 모금함과 서명대를 마련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을 촉구하는 서명을 벌였다. 특히 도서관 앞에서는 고

"학살의 책임자는 당연히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8일, 5월광장 어머니 강연회중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후원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난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청행사에 필요한 약간의 후원금을 남부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전화 763-2606, 796-8364
- 계좌번호 :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 1면에서 계속)

술에 따라 4월 19일과 22일에 수증금속탐지기를 동원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권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올 1월 분실사실을 확인한 김씨 소속부대 총기관리 담당 하사관은 3월 16일 부대재물조사때에 분실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였고, 3월 17일에야 수사가 시작되었다. 군·경대책위는 8일 '협박과 폭행에 의한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손씨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총기분실책임을 김씨에게 뒤집어 씌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기소된 김씨는 오는 6월 13일 1차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경대책위는 아래의 전화로 항의전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전화: 0343-40-1820, 1832

문사려사진전이 열렸는데 인공위성고문, 허뿔기, 개발고문, 발바닥고문, 전기고문, 사형장고문, 스탈린고문, 물고문, 혁수정 고문 등 전신된 고문의 다양함과 잔인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놀람을 표시했다. 운동주 시비앞에서는 김복영씨의 정의과 후배들이 마련한 고문피해자를 위한 하루주점이 여러 동문과 재학생의 참여속에 성황을 이루었다.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 2차공판이 7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운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 16일 두밀분교 폐교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데 이어 열린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원고·피고 양측은 교육전문가의 감정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원고 두밀리 마을주민들은 90년 MBC-TV에 방영된 「세계의 교육」 프로그램중 스위스 산간지역의 농부교장과 22명 아이들의 교육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두밀리분교와 상황이 비슷한 스위스 산간지역에서 두밀리분교 경우와는 정반대로의 교육이 장려되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재판부와 피고측이 직접 검토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한편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은 두밀리분교폐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논문 「농어촌 소규모 국민학교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두밀리분교폐교철회추진위」(대표 신홍균)는 후원회원을 모집중인데 이미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다음주에는 가평시내에서 가두서명작업과 후원회원모집을 받을 계획이다.

◆ 공 판 안 내 ◆

- 6월 9일(목)
 - 이진삼, 폭력행위등, 11시, 422호
 - 배진성, 업무방해, 4시, 317호, 11회
 - 주태봉,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3회
- 6월 10일(금)
 - 이정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1호, 1회
 - 김태일의 4(회망제), 국가보안법, 10시 40분, 317호, 3회
 - 김인숙, 국가보안법, 11시, 423호, 1회
 - 김영하, 국가보안법, 2시, 423호, 2회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9일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일집회 공동선언 "인권침해 범죄자 처벌·양심수 석방"

"평화를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워 나가자"는 한국-아르헨티나 어머니들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0일 오후 7시경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일집회에서 두 나라 어머니들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고문당한 사람이 있다면, 실종당한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서 학살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하게 갇힌 자가 있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그리고 실종된 자식들을 돌려달라고 외쳤다. 임수경씨와 임종석씨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는 자식을 감옥에 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송했다. 김성만씨의 어머니 최인화(68)씨는 "너도 벌써 마흔이 되어가

는구나. 이 세상 양심수들이 석방되는 날, 마지막으

로 명석말아 나오겠다고 했다. 15척 감옥담장을 뛰어넘는 내 기도는 그때까지 계속될 거다"며 울먹였다. 구미간첩단 사건으로 85년 6월 구속, 10년째 복역중인 김씨는 국제엠네스티가 선정한 세계 10대 양심수의 한명이기도 하다. 또한 86세의 고회복할머니는 국가보안법으로 28년째 구금중인 아들 신인영(66)씨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죽기전에 너를 한번이라도 안아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 고회복할머니는 장기수 김선명씨의 삶을 극화한 장면에서 직접 연극인 원창연씨를 끌어안고 "내 아들도 이렇게 있어" 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밖에도 이날 집회에는 출소장기수, 전해투노동자, 시민, 대학생등 5백여명이 함께했고, 초대손님으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안치환, 김광석, 유열씨 등이 나와 노래를 불렀다.

오후 9시 30분경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전경들과 한 동안 실갱이를 벌인 뒤 명동 입구까지 촛불행진을 가졌다. 오월광장 어머니 후야나씨는 "목요일집회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행진을 막아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오늘의 이 감동과 경찰의 행위를 아르헨티나에 돌아가서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오월광장 어머니들은 이날 목요일집회에 앞서 초청정반대에 위치한 우리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매주 목요일이면 열리는 흰색과

◆ 알 림 ◆

□천정연 장기수 가족후원회 이전

·주소 : (121-080) 마포구 대흥동 12-143 대덕빌딩 501호

·전화 : 719-2172 / 팩스 : 719-2173

·사무실 집들이 : 6월 15일(수) 오후 7시

'과거청산의 과제와 우리의 실천전략'

-과거청산과 불처벌에 관한 실천계획 토론회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험을 종합하고 법조계, 사회운동 및 인권운동가들이 과거청산 및 불처벌에 관한 대처방향을 자유롭게 모색한다.

- 발제 1 : 한국에서의 과거청산의 과제 및 실천방안
- 발제 2 : 남미의 과거청산'운동'에서 나타난 교훈
- 토론주제 : ·과거청산의 연대전략(협력해야 할 단체와 세력)-국제 네트워크의 가능성, 그 구성과 모습 등 / ·과거청산의 대중적 실천방안의 구체적 예-법조, 인권, 사회운동, 여론화 등 분야별 실천방안 / ·대중적인 과거청산 방식과 관련된 국제연대활동의 가능한 구체적 방식-UN에 대한 활동, 남미-한국의 연대활동, 전문가들의 연대활동 등 / ·오월광장 어머니회 방한행사의 후속활동의 방향과 생각 교류 등

·시간 : 6월 10일(금) 오후 7시-10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1308호

·주관 :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우리를 잊는다

◆ 단 체 간 행 목 ◆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 자료집)(☎ 796-8364)

·주요내용 :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취지문-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화 희망/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한영문-어머니, 그 평화의 파수꾼들(윤정모)/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연혁/ 5월광장 어머니회 소개-아르헨티나 민주화의 불씨가 되어(김은영)/ '과거청산'의 법적 제문제 등

□계간 사무직여성(한국여성민우회)-1994년 봄호

·주요내용 : 판례와 해설-잡무거부에 따른 부당해고는 불합리하다/ 특집-남녀고용평등법 어디까지 왔다?,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안해성), 껌대기만 남은 여사원제 폐지(최명숙)/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에 대한 여성·노동계의 제안서/ 나라밖 동향-직업상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미국, 로라 스톱) 등(☎ 269-5763)

□시민과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94년 6월(☎ 522-9413)

·주요내용 : 권두시론-잘난 사람은 많으나 좋은 사람은 적다(권오승)/ 서울민사지법 '성희롱' 판결문/ 미국의 성희롱 가이드라인/ 인권문제에 새로 눈뜨게 한 판결(서화숙)/ 문명정부와 검찰권의 위기/ 국선과 당직변호사의 승리(박찬운)/ 박봉숙 변호사를 본다-'박봉숙 변호사' 총평(조상희), 박봉숙 변호사 중 '목격자' 편을 보고(김미화) 등

□군·경 양심선언(양심선언 군·경 지원대책위)-94년 5월

·주요내용 : 농성1주년을 맞으며/ 사랑하는 오빠에게(양심선언자 탐방)/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의 의미와 역할(이재원)/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박정수) 등(☎ 766-8828)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소식(외국인 노동자 피난처)-통권 제8호, 1994년 5월(☎ 859-0430)

·주요내용 : 우리들의 땅에서 수난받는 그리스도! / 외국인 산재노동자 '양심의 행진' 행사소식/ '귀향한 외국인 산재노동자 산재보상금 찾아주기 운동' 등

□제3회 사형제도폐지 정책협의회 자료집(예정총회 인권위등)(☎ 741-4377)

·주요내용 : 주계강연-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조성노)/ 특강-함께 넘어야 할 사형이라는 벽(한기찬)/ 우리나라의 사형집행 연도별 통계(48년-93년) 등

□평화의 일꾼(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94년 6월

·주요내용 : 한 맺힌 광주의 5월(조창순)/ 내가 아직도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한상봉)/ 인권이야기/ 인물탐구-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박선애 선생님) 등

□90년대 한국사회와 광주민중항쟁(한국사회과학연구소)-5월 민중항쟁 학술대회 자료집(☎ 363-1177, 8)

·주요내용 :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광주 민중항쟁(김중배)/ 김영삼 정부의 개방화 정책 비판(박영호)/ 지방자치와 '광주'(강명구) 등

□'94 임투승리와 해고노동자 복직촉구를 위한 전노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자료집(전노대)

·주요내용 : 94년 상반기 임단투 사업/ 연대사업 및 국제활동 보고/ 전노대 대표자 조직 주소록 등

□사형선고와 집행(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대한예장 인권위·사형폐지위(☎ 741-4377)

·주요내용 : (50년대부터 사형제도와 관련된 한국, 외국의 신문기사, 출판물에 실린 글 모음)

고이래선 1주기 추모제

10일 경기도 파주 시립묘지

장기수 고 이래선(당시 72세)씨 1주기 추모제가 10일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용미리 시립묘지에서 열린다. 고 이래선씨는 53년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돼 23년간 옥고를 치르고 76년 출소했으나 사회안전법으로 대전보안감호소에 수감되었다. 89년 사회안전법 폐지로 석방되었으나 93년 6월11일 지방인 위암으로 별세했다. 참석자들은 10일 오전 10시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모여 묘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문의 969-8726

고 이한열씨 7주기 추모제

9일 연세대학교정

지난 87년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씨의 7주기 추모제가 9일 연세대학교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고 이한열씨의 어머니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마다 각자 1백명의 몫을 하길 바란다. 나는 1천명의 몫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저녁에는 '이한열 추모사업회' 주최로 '이한열열사 추모의 밤' 행사가 열렸고, 이에앞서 연세대학학생회 주최로 6·10항쟁 기념마라톤대회가 열렸다.

한편 연세대 총학생회는 10일 '문명정부를 중간 평가한다'는 제목으로 각 단체인 단체, 개인 등이 참가한 가운데 6·10항쟁기념 시국토론회를 연다.

"자보노조에 지지와 연대를!"

8일, 자보노조 위원장

김철호 한국자동차보험노조위원장은 8일 통해 "한국자보노조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원과 연대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자보 경영진이 한국자보노조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자보 경영진의 이런 행위는 사회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정했다.

<국제인권소식>은 기사 넘쳐 쉽니다.

"학살의 책임자는 당연히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8일, 5월광장 어머니 강연회중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후원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청행사에 필요한 약간의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763-2606, 796-8364

·계좌번호 :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중첩되어 쌓여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조직화, 권력형 범죄자 처벌을 활동내용으로 하는 인권단체, 사회운동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일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 후아나씨, 놀리번호사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오월광

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공동대표 홍성우등, 초청추진위) 주최로 열린 '과거청산의 과제와 우리의 실천전략 토론회'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는 일제의 친일파, 중군위 안부, 해방직후 민주투쟁에서 발생한 학살, 조작간첩, 사회안전법 피해자,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교문가해자, 정치압살, 전해투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불처벌'(Impunity)문제를 소개하

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조직화와 기존의 피해자단체를 연결하고,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인권운동이 사회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서씨는 인권침해가 여러영역에 걸쳐있고 사회의 각가지 문제와 관련이 있어 사회·정치운동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를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인권피해자 보호, 조직적인 소송체계, 입법운동, 각 사안별 전문가 조사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방법의 한가지로 권위를 가진 민간법정을 통한 모의재판을 들었다. 모의재판을 통해 과거 불공정한 판결, 권력에 이용당한 여러 인권침해사태의 진상을 대중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오월광장 어머니와 동행방한한 변호사 예도르 놀리씨는 인권침해자가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는 '자기사면법'등이 아르헨티나 민선정부에서 제정되었음을 소개하며 "인권침해자의 처벌은 사회의 구조와 관련있으며 민중이 스스로 싸울때 비로소 인권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아르헨티나의 알폰신정부가 국가실종자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무이행법'등을 통해 '합법

적인 사면조치'를 취한 것은 군부와 손을 잡고 민중을 지배하기 위한 의도의 결과였다고 지적하였다.

'원진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 구성

환경운동연합, 민변, 전노협, 노동과 건강연구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가칭)가 9일 구성되었다. 현재 원진기계의 계약체결 및 이 만큼 최대한 원진기계의 중국이전을 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첫사업으로 21일 오전11시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한뒤 중국대사관 항의 방문을 잡고 있으며, UN인권위, 아시아연대회의, 중국총공회등을 대상으로 정치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마산교도소 양심수

한충목(한청협 부의장)씨를 포함한 마산교도소 양심수 4명은 8일부터 교도소측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관계당국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 및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마산교도소의 양심수들은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이중창문에 전염병 환자들과 함께 수감돼 있으며 절전시간 10분제한, 접견불허 등의 처우를 당하고 있다.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의제도 개선, 환자권리 존중등 요구

'전국병원노조연맹'(위원장 김유미, 병노련)은 10일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환자의 권리보장 등을 골자로 한 의료제도개혁 촉구 제안서에 동감하는 시민 5만여명의 서명지를 보사부 전달했다.

병노련이 이날 전달한 개혁촉구 제안서에는 △의료보험 적용 1백80일 제한 폐지, △치료, 검사,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보험적용 확대, △보건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받을 권리 등 환자권리 보장 제도 마련, △의약품 부조리 척결, △의료서비스 개방 전면 백지화, △감염 또는 직업병 발생률이 높은 병원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노련은 지난 3월 보사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4월부터 2개월동안 각 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을 동을 벌여 지난 4일까지 5만1천2백2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미완성대본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구형

서울형사지법 2단독(판사 부구욱) 심리로 열린 '희망새'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2년에서 3년까지의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나 표현의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국명 발생률이 높은 병원·산재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병노련은 지난 3월 보사부에 이같은 내용의 '의료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4월부터 2개월동안 각 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그리고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

는 것은 내심의 생각을 직접 말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신망 통한 환경정보 전달 환경운동연합 내년 1월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에 대한 행정, 법률, 행사 등의 모든 정보를 한국통신의 컴퓨터통신망인 하이네트-P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제공한다. 국민들의 삶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해 오고 있는 환경오염 실태를 모두에게 제때에 알려주고 예방동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PC(개인용컴퓨터)를 가지고 하이네트-P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백산서당 대표 긴급구속 7년전 책까지 문제삼아

서울경찰청은 10일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김철미(35)씨를 7년전에 출판

한 책까지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87년 12월 자본주의의 붕괴와 사회주의 승리를 논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번역·발행하는 등 89년 4월까지 모두 4권의 책을 발행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부장판사)는 9일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책 최유락(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3년 5월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학생 2백여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사노맹 관련 유인물 5백여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았다.

<단체탐방>은 기사남처 합니다.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 기념대회

1부 : 제5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개회사-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추모사-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
김승훈 신부(사제단)
김동완 목사(한교협 총무)
월주스님(전조계종 총무원장)등

2부 : 열사정신계승 6월항쟁 기념대회

주제연설

과거청산-박원순변호사(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
해고자 복직, 단결권 보장-양규현(전노협위원장)
주거권실현-김진홍(전민협 공동대표)
한반도 평화보장과 전쟁반대-조성우(전국연합자동차위원장)등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3시
·장소 : 한양대학교 노천극장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747-4363, 4)

"학살의 책임자는 당연히 있을 곳에 있어야 한다" -8일, 5월광장 어머니 강연회중

한국의 10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를 초청,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에 하나의 기원을 마련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후원인단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만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초청행사에 필요한 약간의 후원금을 납부해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전화 763-2606, 796-8364
·계좌번호 : (예금주 이윤경)
국민은행 042-24-0453-302/ 농협 055-01-308641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 추진위원회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

◇1부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발제 : 오병선(서강대)
·토론 : 민경식(중앙대), 최성재(서울대), 조강환(동아일보 논설위원)

◇2부 ; 국제화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과제
·경제·노동분과-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정치·사회분과-최경구(경기대)
·법률·행정분과-정무권(연세대)
·복지, 주택분과-현희성(경남대), 황성동(건국대)
·보건, 환경분과-김태구

☎일시 : 6월 11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주최 : 한국사회정책학회(☎ 260-3258)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누

12, 13일 광주방문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

14일 현재 방문 8일째를 맞이한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는 12·13일 광주를 방문, 광주지역 유가족 및 행불자 가족들과 사체발굴·사인규명 작업 등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일 오후 4시 40분 광주 공항에 도착한 후아나씨를 비롯한 「5월광장 어머니회」 회원 3명은 유가족, 민간협 어머니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어 망월동 묘지 참배를 하고 돌탑쌓기에 참가했다. '책임자 처벌, 학살자를 감옥으로' '용서하지도 말고 잊지도 말자'는 뜻의 글귀가 새겨진 들을 쌓아 모인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기도 했다.

13일 오전에는 행불자 가족, 유족회와의 만남이 계속되었는데 5월광장어머니

와의 감담회에서 이들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 "아르헨티나의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서 사체발굴등의 작업을 했으면 한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서로 주소를 교환했다. 또한 광주 민간협·유가족 어머니들은 「5월광장 어머니회」 조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5월광장어머니회 재정운영에서부터 소속 회원들이 직접 당한 탄압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이 얘기되었다.

13일 오후 2시에는 「오월성역화를 위한 시민연대모임」(시민연대모임)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후아나씨를 "나 역시 자식을 잃고 잠못 이루는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이곳 고난의 땅 광주에 와서 감을 이룰 수 없었다"며 광주방문 소

감을 말했다. 그는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아르헨티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리고 있다. 한국여러 어머니들도 자신

이 겪은 고통과 진상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13일 오전10시 광주연합을 방문,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도 동행했으며, 13일 오후7시부터는 「시민연대모임」 주최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한편 14일 오후2시 대전 교도소에 복역중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면회할 예정이다.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장애인의 빈곤문제는 '빈곤과 장애'가 결합된 문제로 빈민장애인은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억압과 고통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한 국가·사회적 대책은 미흡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회장 채종걸)는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를 위해 (가칭) '빈민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 빈민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마다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빈민장애인을 위한 상담소 설치, 강좌 개설 등의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은 정부·민간·빈민장애인 3자의 노력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가구주는 4만4천9백88명이고 이중 장애인 가구주는 6천6백79명으로 14.8%를 차지하고 있다. 빈민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4월동안 2백8명의 사례를 조사·분석했는데 그 결과 이들은 간신히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8일 오후5시 한양대 제2학생회관 세미나실에서 '장애인'과 빈곤-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졌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세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공 판 안 내 ◆

- 6월 14일(화)
 - 이순심씨사건,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 최영익,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2회
 -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1회
- 6월 15일(수)
 - 이태성,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 신학철,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422호, 선고
 - 희망새, 국보법, 10시, 부산지법 선고
- 6월 16일(목)
 - 최은하,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423호, 1회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제5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열사정신계승 6월항쟁기념대회가 11일 오후3시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중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주최하고, 「전국 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1부 '제5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2부 '열사정신 계승 6월항쟁 기념대회'로 진행됐다.

민중민주열사 영정을 들고 유가족 어머니들이 입장하면서 시작된 추모제는 이계 김승훈 신부·진관 스님·김동완 목사·조세형 민주당 최고위원·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어머니들의 추모사로 이어졌다.

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위원장 김진홍 전민협공동대표)는 "우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후 이승만·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공화국의 손발이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농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은 '지금 당장 내 자식을 살려내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청산의 시급성을 말했다.

윤정식 전농의장은 이계 농협과 농민은 벼랑위에서 있다면서 "정부는 UR 재협상을 하고 국회는 최후까지 비준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며 결사적으로 UR비준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범죄자 불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일시 : 94. 6. 15(수) 15:00-18:00
장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회의실

- 발제 : 1.박원순 변호사-불처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대응
2.이승호 교수(충북대)-한국상황과 과제
3.엑토르 놀리 변호사-아르헨티나의 경험과 유산

토론 : 차병직 변호사, 박계동 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선 방동대 교수, 전계량 광주시의회 5·18 진상특위 위원장, 검사 1인(미정)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이밖에도 양규현 전노협 의장과 김진홍 전민협공동대표가 노동자·빈민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유기홍 한청협 의장은 특별결의문 발표에서 한반도의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 것 같고 남북한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상 체결등을 요구했다. 박우석 경기남부연합 공동의장은 결의문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구속양심수 전원석방 △용공조작과 한반도 긴장분위기를 고취하는 등의 목적으로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김영삼정권 거부 △소수특권세력을 살찌우는 반민중적이고 친재벌적인 경제정책 거부 등을 결의했다.

오후 7시30분경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열사들의 영정과 깃발을 앞세우고 한양대를 출발, 동대문운동장까지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UR거부, 농업후까지 비준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며 결사적으로 UR비준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상담소 전화번호' '산업재해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루스 한국지부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무부 임재홍 인권사회과장의 회신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가입 시기는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조약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한승주 외무장관은 '유엔 5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노동자 수첩 발간

가톨릭 노동사목전국협의회와 가톨릭 수원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지난 10일 '노동시간과 임금' '출입국관리소 전화번호'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노동자 수첩」을 발간하였다. 국영문 혼용으로 80쪽 분량에 1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수첩에는 '일하기 전에 주의할 점' '폭행당한 후의 대책' '산업재해시 치료 및 대책' '외국인 노동

사형폐지자료집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원회 사형제도폐지위원회와 문장식 목사(예수교장로회 총회 안전정책협의회)가 편집한 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I) 『사형선고와 집행』가 도서출판 새롭에서 발행되었다. '사형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한국의 사형제도' '사형선고와 집행' '외국의 사형제도' 등의 순서로 사형폐지에 관한 글과 사형폐지운동자료 및 신문스크립 등을 400여쪽에 담았다.

◇ 알 림 ◇

□두밀리 주민과 한한 경기도 교육감의 간담회
·일시: 6월 14일 오후 3시
·장소: 두밀리 마을회관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 대구, 마산, 포항, 마산 5개지역 20여명 일제히 연행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등 인권침해 우려

『대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피의자조사, 7년전에 출판한 책을 문제삼아 도서출판 백산서당 대표 구속.

최근 '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냉전적 이데올로기가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안기부와 경찰청 대공분실등에서 14일 하루동안 20여명을 연행, 공안정국이 다시 부

활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과거 공안정국때와 같은 국가보안법등의 무리한 적용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의 류낙진씨가 14일 오후 1시30분경 안기부원들에게 연행되었으며, 정하례씨도 광주에서 14일 새벽 안기부에 연행되었다. 대구에서는 이영기(31, 대구 새로운청년회 회장)씨와 안형민(91년 대경총련 의

장)이 경찰청에서 나왔다는 10여명의 수사관에게 연행되었으며, 경찰청 홍계동분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일 오후 9시 현재 가족들에게도 연행된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원주에서도 홍중희(38, 원주노동교육연구원 원장)씨가 14일 오전 8시30분경 안기부수사관을 자칭하는 10여명에게 연행되었다. 사용된 차량은 서울1호 1380호 등 3대.

포항에서는 유성찬(30, 대구경북청년단체협의회 의장)씨와 김상식(포항민주청년회 회장)씨, 포항민주청년회 회원인 원해경(24), 조현미(25), 윤요상(32)씨등 5명이 포항에 있는 경북도경대 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마산에서도 강종철(30, 환경기업 녹색공동체)씨등 9명이 경남도경대 공분실로 연행되었다. 마창한길노동자회와 마창 민가협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경 10여명 정도의 경찰관들이 자신들은 도경 보안수사대에서 나왔다고 밝히고 강동화(30,

마창한길노동자회 회원, 수배중)씨 자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마창한길노동자회 상근자들이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장소가 사무실이 아니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였다.

계속 실랑이중 이날 오후 2시 한길노동자회를 압수수색장소로하는 영장을 재차 제시, 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또 출입하는 사회단체 회원들과 노동자들의 몸수색도 하였다. 강종철씨를 면회한 부인에 따르면 강씨등은 '구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일심단결'이라는 유인물 제작팀이 아니냐는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

또 김종하(전 경북대사범대 학생회장, 강동인(전 경북대법대 학생회장)등 현역군인 2명도 14일 기무사로 연행되었다.

이와 같이 14일 하루동안 전국 5개지역에서 일제히 사회단체 회원등을 연행한 것에 대하여 인권단체나 사회운동단체에서는 김영삼정부가 북한 핵사찰 문제를 계기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마창지역 연행확인자 명단 이수옥(신동광학 해고자), 오도현, 오재수(현대기업), 김동한(정비공장)

◆ 공 판 안 내 ◆

◆6월 15일◆

□김상원씨 재정신청 결심/·2시, 서울형사지법 425호

□노태훈씨 불법수사 손배소송/·3시, 서울민사지법 426호

□희망새 공판/·11시, 부산지법 212호

인권침해범죄자 불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

일 시 : 94. 6. 15(수) 15:00-18:00

장 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회의실

발제 : 1.박원순 변호사-불처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대응

2.이승호 교수(충북대)-한국상황과 과제

3.엑토르 놀리 변호사-아르헨티나의 경험과 유산

토론 : 차병직 변호사, 박계동 민주당 국회의원, 강경선 방통대 교수, 전계량 광주시의회 5·18 진상특위 위원장, 검사 1인(미정)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후원 :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원회)

이순심씨 10년 구형

는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체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16일 폭력남편을 경살해하고 구속기소된 이순심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검사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의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철준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년동안 남편으로 부터 어떠한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는지 밝혀졌다.

둘째,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할 수 없었다. 경찰에 고소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웃이나 친척에게 조차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셋째, 오랫동안 남편에게 구타를 당해오면서 기억력 저하, 신경과민, 공포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을 볼때 일시적 책임무능력상태가 될 수도 있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살해행위가 긴급성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긴급성을 판단하는데 자료"라며 "첫째,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변호사는 아

내구타가 단순히 부부싸움이며 가정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며 그 의식이 법제도에도 스며있다고 보고 "이번 문제는 이순심씨와 사회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제기한뒤, 제2, 제3의 이순심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순심씨는 최후진술에서 "남편이 너무나 무서워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고 말을 잊지 못한 채 호소했다.

재판을 지켜본 김경희(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실행위원장)씨는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시각에서 구형을 한 것은 말도 안된다. 이순심씨의 지난 20여년간의 가정생활에 대한 참작이 전혀 없었다"며 구형량에 불만을 나타냈다. 남충지(한국여성의전화 간사)씨도 "검사의 구형이 많고 적응을 떠나 지난 5차공판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년 넘게 아내를 구타해온 남편은 제쳐두고 피고에게만 가정공동체를 파괴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며 반문했다.

선고공판은 28일이며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28일 전에 재판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기로 했다.

"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

총기절취 혐의 김벽창씨 공판

지난 13일 오후 수도권 군사법원에서 총기절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벽창씨의 첫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김씨는 "헌병대 수사관에 의해 강제연행되

어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전기의자에 앉혀졌다"는 협박과 하의를 벗기고 쇄꼬챙이로 성기를 치는 등 성고문을 당했다"며, "총기를 훔쳤다는 자백은 공포 분위기에서 살기 위해 어쩔수 없이 나온 것"이라고 진술했다.

공판에서는 독수리 훈련 기간동안 총기소지 부적격자에게 총기르 지급한 사실, 총기수급대장의 파손 사실 등이 확인되어 허술한 부대총기관리문제가 드러났다.

아들잃은 5월광장어머니에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44년째 복역중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면회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의 후아나씨와 아우로라씨 그리고 서경순(민가협 상임의장)씨 등은 14일 오후3시경 대전교도소를 방문했다. 대전교도소측으로부터 면회거절을 당한뒤 결국 박계동국회의원만이 오후6시가 지나 김선명씨를 면회할 수 있었다.

김선명씨를 면회한 박의원은 "신문을 통해 후아나씨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아들을 잃은 그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아르헨티나에서 먼 이곳까지 찾아준데 감사드린다. 직접 만나고 싶었다. 감옥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김씨의 말을 전했다. 면회를 하는동안 교도소밖에서는 민가협등 1백여명이 오후9시가 넘도록 집회를 벌였다.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발표

-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법대)
-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 6월 16일(목) 오후2시
·장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22-7284)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농협 011-01-404581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예금주; 서준식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예술의 자유, 안정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재단원 3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열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 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허피고

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안·최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그러나 허피고인은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국가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재판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

술의 자유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다”며 “이같은 규정은 위헌심판결정이 없는 한 아직도 실정법으로 유효하며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피고인등은 지난해 3월2일 창단된 노래극단 「희망새」에 가입,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을 준비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었다.

안재구씨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지난 14일 안기부와 경찰이 전국 5개지역에서 20여명을 연행한 것 이외에도 안재구(61, 남민전 사건으로 9년 복역, 88년 출소, 현 경희대 강사)씨가 14일 새벽 2시 30분경 대흥동 소재 연구실에서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안씨에게는 15일 오후2시경 자택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통지서가 배달되었다. 또 박래군(34, 고대 81학번)씨도 14일 새벽2시경 자택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한 안기부 수사관에 의해 연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15일 현재 연행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은 김승환(28, 포항민주청년회 회원), 김진배(포항노동자), 정찬수(건대 82학번) 등. 한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장 유기홍, 한청협)은 “북핵문제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가상전쟁시나리오가 발표되는 등 호전적 분위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때에 발생한 한청협 산하단체에 대한 불법수색과 연행은 포악한 매카시즘적 탄압과 동일한 것”이라고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강조했다.

또 한청협은 “이 상황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주·민주·통일의 전진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현재를 ‘바상국면’으로 선포하고 ‘신 공안정국 분쇄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밀실수사의 중지와 연행된 회원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한청협은 또 15일부터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 토론회

오는 7월 새로 임명될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성에 기여하고,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임명자에 대한 일정한 검증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전문법조인, 법학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주제 발표

-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
-안경환 교수(서울대법대)
- 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
-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
-이석범 변호사(민변)
- 어떤 사람이 대법관에 임명되어야 하는가?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

·일시 : 6월 16일(목) 오후2시
·장소 : 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소회의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522-7284)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부산지검 동부지원 형사부(재판장 황형모 부장판사)는 15일 어머니, 동생, 자신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양애리(21)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죄를 적용,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양피고인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인정한 뒤 경찰진술에서 아버지가 자해로 숨진 것이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 아버지의 자해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누적된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의학자가 자해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한편 「전국여학생대표자협의회」(대표 나온주 부산대총여학생회장)은 지난 6월초 재판부 앞으로 양씨의 무죄석방을 요청하는 서명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경기교육감 두밀리주변과 간담회

지난 14일 한환 경기도교육감은 두밀분교 폐교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두밀리를 찾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두밀리 학부모들을 비난하였다.

경기도 교육위와 가평군 교육청 관계자 등 20여명이 수행한 가운데 열린 두밀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정한 뒤 경찰진술에서 아버지 자해로 숨진 것이 아니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 아버지의 자해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가정

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누적된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법의학자가 자해가능성이 높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하기도 했었다.

한편 「전국여학생대표자협의회」(대표 나온주 부산대총여학생회장)은 지난 6월초 재판부 앞으로 양씨의 무죄석방을 요청하는 서명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지난 86년 3월 영등포 중앙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특별검사는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의 집단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서

을고법에 의해 재정 결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래 만3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는 차두갑(영등포시립병원 당직의사)씨를 증인으로 소환, 신문할 예정(7월 6일 오후 2시)이다.

86년 3월 10일 중앙파출소 연행 후 행방불명/ 4월 14일 영등포시립병원에 중상을 당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됨/ 5월 26일 사망

89년 10월 재정신청 결정 - 서울고법/ 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경찰(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 인권 간행물 ◆

□후원회소식(통권32호)-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요내용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한백렬 선생님/ 우리의 주장-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 그런 막둥이가 간혀있다는게 얼마나 가슴아픈지-양심수 가족을 찾아서(한철수의어머니 고대연님) 등

□서울시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 주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216-0683)

·목적 : *빈곤문제와 장애인의 빈곤에 관한 고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의 실태조사-연구의 목적과 방법, 사례연구 및 조사결과의 요약, 조사결과의 분석(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취업구조, 의료 등)/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가구주 실태조사에 관한 대책안 등

□인권침해범죄자의 불처벌 문제-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대한법학(☎ 522-3763)

·주요내용 :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가지 생각-(엑토르 놀리, 오월광장 어머니회 담당변호사)/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

□94년 한국노동법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한국노동법학회(☎ 584-0054)

·주요내용 : 최근 노동판례의 경향과 문제점(이상덕)/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하경호)/ 불투명한 노동계약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방안(이철수) 등

□노동관계법의 회고와 전망(연구논문 모음)-산업사회연구소(☎ 584-0054)

·주요내용 :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및 구제상 제문제점(배병우)/ 노동법의 반성과 과제(이광택) 등

엠네스티 한국지부 기금모금 요청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콜롬비아 캠페인, 중국의 사형제도, 미국의 아이티 난민문제 및 특히 7월 28일 - 8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의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희망합니다.

계좌번호:외환은행 110-13-06191-4(예금주 오환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053-426-2533)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대법관 임명 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동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

7월10일로 임기만료되는 대법관 임명을 앞두고 신임 대법관 임명과 관련,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은 16일오후 2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대법관 임명에 대한 집중 토론회'를 열었다.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 그 구성의 중요성'에 대해 안경환(서울대 법대)교수는 "국정과 국민생활의 전면에 걸쳐 발생하는 이해를 조정해야하는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관의 임명에

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는 효과적 방법은 국회 청문회 개최"라고 말했다. 이석범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에서 청문회를 통한 신임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파악,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에서 대법관 임명에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과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기 위해서 대법원은 지금이라도 대법관 임명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자료 등을 발표하고, 국회

는 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 세부적인 인사청문회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은 문민시대의 첫 대법관이 과연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립(민주)의원은 "대법관제도에 재야 판·검사·학자를 포함시킨다는 강제가

있어서만은 인사위원회 청문회를 도입토록한다"는 사법제도개선을 민주당의 의견으로 내놓았다.

끝으로 정태윤(경실련 정책실장)씨는 "대법관 임명을 승진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대법관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소신과 의지를 작고 있는 사람 △급변하는 사회상황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진취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당한 생활을 하면서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꼽았다.

“희망과 연대의 시작”

17일 출국 오월광장 어머니 고별행사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추진위」(공동대표 김승훈신부등, 초청추진위) 초청으로 지난 6월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후아나, 아우로라 씨 등 3명은 16일 저녁 7시 조계사에서 열린 고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이날 행사는 민가협 회원, 장기복역출소자, 유가협 회원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희망과 연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후아나씨등 오월광장 어머니는 “평상시 집에 있어

야 할 자식들이 끌려간 한국 어머니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고통을 이겨내고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가까운 시일내에 바뀐 세상을 볼 것”이라며 “국민이 성숙한다면 한국 씨 등 3명은 16일 저녁 7시 조계사에서 열린 고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쳤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월광장 어머니는 유가협안 내로 오전 11시 마석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다. 오월광장 어머니는 17일 출국한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대법관 임명’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교수
- 1.머릿말 2.대법원은 정책법원이 되어야 한다 3.대법관의 임명은 국민적 관심과 참여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국내법상 대법관 임명절차와 외국의 사례-이석범변호사
- 1.문제의 제기 2.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법이론적·실정법적·해석론적 근거, 외국의 입법례) 3.현행 법체제내에 논의가능한 구체적인 인사청문회의 절차 4.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결론
-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정태윤 경실련 정책실장
- 1.법원개혁의 방향 2.대법관의 임명을 승진의 연장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3.대법관 임명의 구체적 방안 4.어떤 사람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가?

안재구씨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창원에서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잠안재우기등 심각한 인권침해

16일부터 25일까지의 '거동수상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전국기관차협 의회」(전기협)의 파업결정을 '북한핵문제와 연관 강경대응 결정',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를 제3차 개입혐의로 내사하는 등 보수적인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16일 북한 조선노동당 남한 지하당 사건과 「영남지역 일심 단결」이라는 조직사건이 발표되어었다.

국가안전기획부와 기무사, 경찰 등은 16일 안재구(61, 남민전사건 관련 북역, 경희대강사)씨등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 및 반국가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안기부는 안씨가 91년 5월 일본을 통해 국내에 침투한 재일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조선노동당에 입당, 조선노동당 남조선 지하당을 건설하라는 지령을 받아 93년 1월 「구국전위」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또 안씨가 △ 「구국전위」, 창립선언문을 작성 북한에 보고 △주요 공장에 민주노조 결성 △노동현장에 노사분규 유발 △청년단체연합회 결성하는 등의 전국규모의 간첩망을 구성하였다며, 증거물로 △창립선언문, 강령, 규약 △국내동향 대북보고문 △난수해독용 사전 등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자명단(괄호안은 나이, 직책, 수사기관)
안재구(61, 중앙위원장, 안기부), 정화려(30, 연락책, 안기부), 류낙진(66, 광주·전남책, 안기부), 홍중희(37, 원주·강원책, 안기

부), 박래군(32, 서울·경기책, 안기부), 이영기(27, 대구·경북책, 경찰청), 유성환(29, 조직원, 경찰청), 안영민(25, 조직원, 경찰청, 안재구씨 아들), 강동인(24, 기무사), 김종하(26, 기무사)

한편 안씨와 안씨의 아들 안영민씨를 16일 면회한 가족들에 의하면 이들은 조사받는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행과정에서 구속사유와 변호인 선임권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6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구속사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국가가 이런 행위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적도 있다.

마산·창원에서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 정찬수(30, 연합기계 노동자)씨등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마산·창원지역과 양산공단 등지에 취업해 <영남지역 일심단결>이라는 지하조직을 결성, 노동자들에게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북한 원진 「변혁」등 이적표현물과 김일성주석등의 사진을 지니온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자 명단
정찬수, 김진배(26, 흥국산업), 김동현(27, 회사원), 오재수(28, 현대기업), 오도엽(26, 대일화학), 이수욱(24)

지상중계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편집주: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처벌'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오후3시 30분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열린 '인권침해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12·12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만행등 과거청산문제 둘러싸고 특별법마련과 특별검사제도 도입이 요구되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나라의 경험과 과제를 나누는 자리에는 박원순변호사, 「아르헨티나 5월광장어머니회」 담당인권변호사 엑토르놀리씨, 이승호(충북대 법대)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차병직변호사, 박계동(민주)의원, 강경선(방송대 법대)교수, 전계량(광주시의회)의원이 참석했다.

박원순변호사는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의 주제로 국제사회의 경험을 통해 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문제를 발표했다. 불처벌문제는 이미 2차세계대전 전후해 잔학행위에 가담한 개인도 국제법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론과 관행이 성립된데서 선례를 찾을 수 있다고 박변호사는 말했다. 뉴른베르크와 동경의 전범재판소가 그 예인데 이를 통해 △개인이 처벌될 수 있으며 △비인도적 범죄등은 범죄지, 국적을 넘어서 '보편적 관할권'이 인정되며 △공소시효라는 시간적 제한이 처벌에 부과될 수 없다는 조약이 탄생되었다고 말했다.

그뒤 동서냉전으로 인권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했으나 '상설민중재판소'등 여론의 법정을 통해 세계여론에 호소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와 세계적 인권단체들이 유엔인권위원회에 80년대후반 이후 매년마다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진실규명없는 처벌은 자의, 화합차원의 응서와 사면논리는 부당 불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민간정부는 '국민대화합'의 차원에서 응서와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진실의 규(☞ 3면에서 계속)

엠네스티 한국지부 기금모금 요청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콜롬비아 캠페인, 중국의 사형제도, 미국의 아이터 난민문제 및 특히 7월 28일 - 8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엠네스티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회를 준비하는데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분의 정성어린 후원을 희망합니다.

계좌번호:외환은행 110-13-06191-4(예금주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053-426-2533

(2면에서 계속)

명없는 처벌이나 배상은 자의와 족수로 연결되게 마련이며 진실과악의 노력없는 사면은 결국 불처벌과 같은 것이다"고 그는 말했다.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와 조치는 진실과악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의 문제에 대해 박변호사는 "2차세계대전 중의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들에게 대해 공소시효와 소급효의 문제를 제기했다. 독재정권에 의해 벌어진 각종 잔혹한 인권침해행위는 마땅히 시효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인권침해행위에 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경우 2차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벌과정에 예외를 두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유린행위 여전

엑도르 놀리변호사는 민족전체를 휩쓴 불처벌문제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또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중남미 침입의 영향에 대해 얘기했다. 국가보안법은 민간독재나 군사독재에 있어 공동된 무기이며 특히 군사독재는 사회질서와 안보를 이유로 공세를 폈다고 말했다. 그 영향은 경제·정치·이데올로기적으로 나타나며, 미국은 군사학교의 군인양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정치가 군사화되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중남미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민중사이를 서로 괴리시켰고 법을 무시해도 좋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남미국가는 탈국가 현상과 초국가적 자본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아무리 민선정부라도 부패한 정부라면 절대로 협조해선 안되며 국가권력과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들이 나온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계동(민주)의원은 국가보안법 내용 자체가 법적인 의미에서 명백히 위헌인데도 국가가 묵인하고 있다고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적 과제/이승호교수 1.들어가는 말 2.심판의 대상-시기의 범위, 5·6공 정권의 원죄(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만행), 일반적인 인권침해 범죄 3.심판의 방법-현행 형사법상의 방법, 인권침해 범죄자들에게 대한 심판의 방법, 공소시효의 문제 4.맺는말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엑도르 놀리 변호사

말하면서 안기부법 또한 안기부 직원과 관련된 범죄수사권은 안기부가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기간 공소시효 정지돼야

이승호(충북대 법학)교수는 '한국에서의 인권침해자의 처벌을 법적 과제'에서 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만행은 과거에 한 정권을 탄생시킨 사건인 만큼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가가 나서서 '특별검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통한 헌법소원으로 해결 방안으로 들었다. 이교수는 공소시효 문제를 "앞에서 지적인 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주도자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 재직시 내란·외란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재직시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공소시효는 그들이 수립한 정권이 바뀐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등 26개국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공소시효에 관한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계량의원도 광주민중항쟁의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며, 범죄자의 역사적 심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계동의원은 "김영삼정부이후 과거 의혹사건이나 과거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과거 범죄를 인정은 하지만 '처벌은 하지 말자'든지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의 철저한 조사작업은 인권탄압 상황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리에서 차병직변호사는 "의문사는 불법적인 생명권 침해"인데 우리 헌

법에는 생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이 되는 생명권은 법이나 국가가 보장해야 할 절대가치라고 말했다. 정권교체의 과도기에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사건등 집단의문사 만행이 저질러졌는데도 의문사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문사 등 과거청산의 과제로 진상규명, 법적 처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말했다.

명예회복·사회보장제도도 혁신필요

그밖에도 강경선교수는 "과거청산은 헌법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해차원에서 과거청산을 말하기 이전에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을 통한 화해의 모습으로 과거문제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손해배상, 양심수를 비롯한 억울한 사람들의 전면석방, 노동자·농민·도시빈민 등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등을 들었다.

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16일 오후 5시 제39차 목요집회를 통해 "최근 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성된 공안정국에서 대규모연행이 있었다"며 "과거의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적인 구속을 연상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또 "통일을 위해 싸우다 옥에 갇힌 양심수의 가족들은 민족을 우선에 두고 분단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남·북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 1. 서론-민주적 이행과 '불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불처벌' 문제 논의의 진전과정-2차대전 직후의 선례, 80년대 '불처벌' 문제의 국제사회로의 확대과정, 국제법적 발전과 그 한계 3.'불처벌'논의의 제정점-국민적 화해요구와의 충돌, 진실규명과 '불처벌'과의 상관관계, 명령복종행위자의 책임문제, 공소시효의 소급효, 보편적 관할권과 송환의 문제, 책임자에 대한 공직추방문제 4.'불처벌'의 실현과정-사실상의 불처벌(사실의 조사와 수사과정, 기소와 재판과정, 판결의 집행), 법적 불처벌 5.불처벌의 지역적 현상-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동구권 6.결론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엘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한청협 "신공안정국 조성" 규탄

국제엘네스티 사무국은 16일 발표된 '구국전위', '영남지역 일심단결' 등 조직사건에 대해 북한핵 문제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엘네스티 사무국은 17일 각 그룹에 보낸 '긴급구원행동'(Urgent Action)을 통해 "한국에 있는 3백여명의 '정치범' 상당수가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엘네스티는 또 과거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대통령, 안기부장 등에게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도록 촉구하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혐의가 즉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석방할 것을 촉구하라"고 권고했다.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유기홍, 한청협)도 '구국전위' 사건과 관련,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헌정부가 북한핵문제를 빌미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한청협은 "이 사건이 조 작된 것이 아니라면 수사관 했다"고 주장했다. 한공작원과 공작금의 출처와 경로가 어디인지 밝혀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청협은 "실사 '구국전위'의 실체가 사실이라면 93년 1월에 결성된 뒤 건설초기단계에서 적발하지 않고 이제 와서 검거·발표하는지 그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청년단체의 연합체 결성운동은 단체회원들의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건설되고 운영되는 한청협과 전회원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했다.

한편 기무사에는 강동인, 김종하씨 외에도 성상락(경북대법대 휴학), 김한엽(경북대농대 휴학)씨 등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국 사회주의학생연합'(사학련)을 결성, 혁명적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목표로 활동해온 혐의로 박정미(22, 경희대 국문4)씨가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3년 10월 사학련을 결성 한 뒤 이 단체의 연락부장겸 선전책을 맡아 혁명적노동자정당의 건설을 주장하는 기관지 '노동자연대'를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해투

해고자 복직노력 촉구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위원장 조준호, 전해투)는 6월부터 해고노동자 문제가 있는 사업장 등이 해고노동자복직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고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장별 '복직요구 방문'을 벌이고 있다.

17일 강종철 전해투 집행위원장등이 '복직요구 방문'을 위해 대우센터로 가는 도중 경찰이 가로막아 대우정밀 해고노동자 박종석씨의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다.

전해투는 지금까지 금호그룹, 태평양그룹 등 9개 본사방문을 했다.

여민회 상담원교육 실시

'한국여성민우회'(공동대표 이경숙등, 여민회)가 올해말 설립을 준비중인 '일, 가족, 성상담소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할 상담원 교육을 6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주동안 실시한다.

기존의 상담소에서 성, 가족 등 여성문제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주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여성문제가 분리되는 측면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 가족, 성상담소 추진위원회'는 이번 상담원교육후에도 내용을 심화시키는 교육을 계속할 예정이다(☎ 269-5763*5).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일시 : 6월 20일(월) 오후6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1부 : 창립대회

- 1) 경과보고 / 2) 회칙심의 및 채택 3) 임원선출 / 4) 사업계획안 채택 5) 창립선언문 낭독

2부 : 기념강연 - "인권운동이 나아가길"

(오재식, 전 WCC 국장,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원장)

문의 : 522-7284, 796-8364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단체탐방 23 / 노동인권회관

시련 뒤에 잉태된 옥동자라 할까? 노동인권회관이 만들어진 배경을 돌아보면 누구나 이 귀한 열매를 다시 한번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 모진 돌바람 중의 하나였던 성고문 사건, 그 바람을 맨몸으로 맞아야 했던 권인숙. 눈물과 가슴치는 고통으로 변론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 그리고 '채수없는 희생자'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을 생각하게 해준 세상이 모태가

되어 노동인권회관이 태어났다.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 4천만 원을 손에 쥐고 그것이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노동자·여성인권침해에 대한 징표라고 생각한 권인숙씨는 앞으로 있을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자는 생각을 했고, 그 취지를 들은 조영래 변호사는 모금운동을 벌여 기금을 조성했다. 그것을 씨앗으로 89년 10월 28일 문을 연 노동인권회관의 간간의 곡괭이질, 굶어진 손마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자.

노동인권회관의 주요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업병, 노동조합활동,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노동상담활동이다.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많은 노동자를 만났고 절절한 인간관계를 경험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안고 찾아온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파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대리인'이 되어 처리할 일에 접할 때 무자격 상담자로서 노동위원회 등에 참가하기가 불가능했고 변호인을 동반한 회사측의 대응에 맞서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또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수준도 많이 달라졌으나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통해 단련된 '감'으로 상담을 하기에는 법률실무등의 면에서 뒤떨어진 감이 많았다. 이에 '상담의 전문화'를 부르짖으면서 결실을 보게 된 것이 노동인권회관내에 '공인노무사사무소'를 개설한 것이다. 91년부터 1년간 노동인권회관 실무자로서 일해온 노행남씨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갖추어 인권회관의 상담실장직을 겸임하면서 공인노무사사무소를 지난 3월에 정식등록하게 되었다.

둘째, 노조 방문교육이 주를 이루는 교육활동이다. 노조활동에 대한

것 뿐 아니라 노사양쪽의 관계를 위한 교육, 특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인권회관에 소속된 노사관계전문연구자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루어지는 자료조사·연구활동이다. 학자들의 능력과

'희생자'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을 생각하게 해 준 노동인권회관

인권회관 실무자들의 현실감각과 경험, 해결방안에 대한 통찰력의 결합이 중요하다. 93년 대우조선노동조합원의식조사, 서울신탁은행 노동조합원의식조사, 현대3사 노무진단팀에서 노동조합부문을 담당할 활동 등이 있었고, 올 6월말 마무리될 예정으로 구로공단노동자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시기에 노사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에서 연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노조간부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는 '세계적 주요기업의 노사관계사례집'을 7월 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사관계에 관해서는 주로 기업차원의 경영합리화면이 부각되었던 것이 현실이나, 이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이번 사례집을 계기로 노조간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계속적으로 발굴할 것이고 국내조사를 축적·유형화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노동자의 구체적인 현실에 체계적으로 접근한 보고서로써 노동백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 백서수준에는 못미치지만 제대로 된 노동인권백서의 발간을 꿈꾸며 최선을 다한 열매가 '노동인권보고서'이다. 올 6월 22일에 제 4집 발간기념회를 가지게 되는 노동인권보고서는 노동인권백서의 '출발'의 의미를 가졌고 한 해의 노동자의 구체적 수준, 생활에 대한 핵심 보고서이다.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92년 강경대 열사

정국이후 유지할 수 없을만큼 어려워 회관의 문을 닫느냐를 고민한 때도 있었다. 이때 김문수(전 소장)씨와 노병직(현 소장)씨가 인권회관에 합류하면서 키잡이로서 고민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원봉사의 심정이 아니라 인권회관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장기적 터전으로 삼아 일할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급여규정을 두고 작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그만큼

일꾼들의 전문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기관으로나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주요목표였고 현재 7인의 엔진이 힘차게 가동중이다. 현 인권회관 소장인 노병직씨는 권씨와 인권회관에 대한 인연과 애정이 남달리 깊다. 권인숙씨가 막노동현장에 뛰어들어 인노련과 관련하여 그 모진 고초를 당할 당시 그가 인노련 부위원장이었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렇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은 '마음이 고달프다'. 노동자들의 처지가 향상되어 개인적 삶 자체는 풍족해졌다고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접은 그에 걸맞지 않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요구는 반사회분자로 취급받기 십상이고 사회전체가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현실이 어렵고 마음이 무겁다고 한다. 노동자들이 '정신적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할까? 이런 노동자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회전체가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인권회관이 있다면 인권회관을 잉태한 세상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알 림 ◆

□군민주개혁 촉구와 양심선언자 보호 특별법 제정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 일시 : 6월 18일(토) 오후3시-10시
- 장소 : 동국대 다량관 보리수(3층)
- 주최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이내창 추모사업회 회원의 날

- 일시 : 6월 19일(일) 12시 / 장소 : 안성교정 대운동장
- 출발 : 10시30분(혹서동 교문앞)
- 주최 : 이내창 추모사업회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출범

20일,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 등 사업 결의

인권단체간의 연대와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증진하고 국내외 인권신장을 위한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 Korea Human Rights Network, 영문약칭 KOHRNET)가 20일 창립되었다. 인권협은 93년 3월 창립한 '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취지와 성과를 조직적으로 계승하고 인권현안에 대한 협의, 국내외 인권관련 정보수집과 배포, 인권교육, 국제인권연대활동 등을 펼쳐 나갈 구상대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표자회의와 각 회원단체의 실무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다. 이 중 상임대표(가나다순으로 선출)는 민변가 양성을 위한 인권포럼이 예정돼 있다.

창립선언문에서 인권협은 "인간의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건강·교육·환경권 등을 차등없이 누려야 하며, 여성·아동·노인들도 차별과 학대, 소외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증진할 사회제도의 정비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인권협은 수십년간 우리 사회를 파행으로 몰고온 국가보안법 폐

지와 반인륜적 인권침해범죄의 진상규명과 처벌등을 요구했다. 인권협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주의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등 9개 인권단체들로 이뤄졌다. 인권협내에는 회원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대표자회의와 각 회원단체의 실무대표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다. 이 중 상임대표(가나다순으로 선출)는 민변가 양성을 위한 인권포럼이 예정돼 있다.

향해 모아진 계기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 성과를 실현시킬 주체는 정부나 이익단체가 아닌 바로 도덕적 힘을 가진 민간단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인간의 참된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는 세계연대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일교포 탄압에 대한 문제의 심각

성을 말하면서 우리 역시 소수민족의 권리에 대해 무시해온 민족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지키는 인권은 기본적·보편적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인권의 주체는 인간임을 강조했다.

오씨는 또 인권협의 실천과제로 "첫째, 과거청산문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종교단체, 시민단체등 모든 단체들과의 굳건한 연대 속에 가능하다. 둘째, 국제연대를 얘기하면서 정부의 대외적 활동을 감시하는 압력단체로 인권단체가 활동해야 한다. 셋째, 인권종합정보센터의 건설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권협이 인권피해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연대가 될 것을 당부했다.

◆ 공 판 안 내 ◆

- 6월 21일(화)
 - 고 김귀정씨 손배소송, 2시, 민사지법 562호, 결심
 - 상순식, 특경가법, 4시, 311호, 4회
- 6월 22일(수)
 - 고 신장호씨 손배소송, 10시, 성남지법
 - 백형록,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2회
 - 조계은, 국가보안법, 2시, 311호, 4회
 - 김태일의 4, 국가보안법, 11시, 4회
 - 유영상의 2, 공문서위조등, 10시, 318호, 선고
- 6월 23일(목)
 -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손배소송, 10시, 민사지법 559호
 - 고 박창수씨 손배소송, 10시, 민사지법 559호
 - 김연인, 국가보안법, 10시, 321호, 3회
 - 김태홍의 2, 국가보안법, 2시, 418호, 속행
- 6월 24일(금)
 -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1시, 418호, 3회, 2심
 - 김인숙, 국가보안법, 10시, 423호, 선고
 - 김영하, 국가보안법, 2시, 423호, 속행
 - 정용화, 업무방해등, 10시, 422호, 3회
 - 김지현의 2, 업무방해등, 10시, 319호, 속행

재일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재일동포 분노

재일동포학생들에 대한 민족적 박해사건이 급증되어 일본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학교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국회가 이를 우려할 사태라고 심각성을 표시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다. 어머니회는 조선학생들에 대한 박해건수는 4월부터 6월15일까지 1백24건이나 되며 발생지역은 조선학교가 있는 모든 지역으로, 주로 중년 일본남자들이 주범이며 이 중에는 70대 고령자나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일본인들은 "조선정! 돌아가라!", "조선정! 죽인다!" 등의 민족적 멸시에 찬 쌍욕을 퍼붓거나 침을 뱉는 것은 예사이고, 동교시 차 안에서 가위로 조선여학생의 치마나 저고리 소매를 찢거나, 칼로 협박을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에는 "조선학교를 폭파한다"는 협박전화가 두차례나 걸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공공장소에서 꺼릴 것 없이 저질러지고 있으며 피해자는 주로 '치마와 저고리'를 입은 초·중·고 여학생들로 나타났다. 이에 일본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국토법 위반」 이유로 지난 6일 교토부 경찰 4백50명을 투입해 조총련 교토조직과 역원들의 가택동 27개소를 강제수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어머니회는 전했다.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취임식 및 출판기념회
22일 6시30분 기독교회관

「노동인권회관」은 22일 오후 6시30분 한국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취임식 및 『94년도 노동인권보고서』(제4집, (주)사회평론 펴냄)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신임소장 노병직(41·전 사무국장)씨는 "인권회관을 전문노동단체로 만들어, 회관의 상근자들이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가가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출판기념회를 갖는 『노동인권보고서』는 해마다 발행되는 것으로 4집에는 노동정책, 임금, 노동시간, 고용, 노사관계, 산업재해, 여성,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 93년도 노동인권상황을 총괄했다. 특집으로 구로공단 쇠퇴과정과 향후전망을 살펴본 「구로공단 실태 및 노동자 의식조사」와 현대노동자들의 연대과업과 문제점을 조명한 「현대계열사공동맹쟁보고서」가 눈에 띈다. 그 밖에도 외국인노동자의 취업현황과 근로조건을 개괄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이중성과 문제점을 짚은 「외국인노동자 인권현황과 정부정책」, 유형별 타아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타아정책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 「타아시설 실태를 통해본 타아정책의 개선방향」이 실렸다. (전화 858-5837, 8).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재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 인권 간행물 ◆

- 월간 인권(94년 5·6월호)-한고협 인권위
·주요내용 : 반인권의 산을 넘고 또 넘읍시다-취임사(김상근)/유엔인권위원회 50차 회기경과와 결과(코누크)/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전해철) 등
- 대법관 임명에 관한 집중토론회(자료집)-민변
·주요내용 :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원리(안경환)/국내법상의 대법관 임명절차 및 외국의 사례-국회에서 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중심으로(이석범)/ 시민이 바라는 대법관(정태운) 등
- 환경리포트(5·6월호)-YMCA 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주요내용 : 제2차 지속개발위원회(CSD) 개최-지속가능 소비 행태, 환경과 무역, 주요그룹의 역할 등 논의(최훈)/ 환경운동과 지식인의 역할(정수복)/ 녹색GNP의 의의와 그 개발방향(김승우)/ 한국의 공해법,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신동진)/ 덕유산국립공원을 파괴한 무주리조트와 양수발전소(오구균) 등
- 월간 함께걸음(94년 6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사립특수교육기관의 설립과정과 교육적 상황-한국특수교육 10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김병하)/ 재활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 왜 이리나/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공격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전홍운)/ '내부양심선언자 보호특별법' 제정 움직임(박순순) 등
- 환경과 사회(94년 여름호)-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주요내용 : 한국환경운동의 위상과 과제(이상헌)/보건의료운동의 평가과 전망(김용익)/ 산업재해 직업법 실태와 대책(김은희)/ NGO와 미국의 국제환경정책 결정과정(바바라 J.브래들, 캐러디 포터)/ 한국장애인들의 전망과 장애인운동(신홍호) 등
- 우리네 아이들(94년 5월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주요내용 : 세계가정의 해에 생각해보는 공동육아(김미령)/한국아동학대의 현황과 과제(홍강익)/한·일 보육교류의 내일을 본다(서정은)/영유아 보육시설 안전실태조사 등
- 운동본부소식(94년 6월호)-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주요내용 : 이제는 미군기지를 돌려받을 준비를 할 때다(김용환)/ 윤금이씨 살해사건이 남긴 것 등
- 함께가는 여성(94년 6월호)-한국여성민우회
·주요내용 : 환경운동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를 바꾸는 일(이성미)/ '키 작은 것도 여성에겐 죄가 됩니까?'(최옥주)-민우회, '용모단정 요구 44개 기업체 집단고발'/지역사회운동의 구심으로 여성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한다(명진숙)-<(가칭) 일·가족·성 상담소> 설립의 내용 등
- 노동인권보고서 4집-노동인권회관
·주요내용 : 93년 노동인권상황 개관/ 문민정부 노동정책 1년/ 93년 부문별 노동인권 현황(임금, 노동시간, 고용, 노사관계, 여성노동자의 지위, 산재, 외국인노동자)/ 구로공단실태 및 노동자 의식조사 설문결과/ 타아시설 실태를 통해서 본 타아정책의 개선방향 등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소식(제6호)
·주요내용 : 좌절을 딛고 악몽을 떨쳐버리려 애쓰는 사람-고문후유증 사례⑤/ 기획연재①-고문은 가장 잔혹한 인권유린행위다 등
- 노동인권소식(94년 6월)-노동인권회관
·주요내용 : 더욱 소중히 가꾸겠습니다(노병직)/ 시민운동의 지평은 넓고 넓다(이용선)/ 해고노동자의 편지-정든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조수원)/ 상담사례-통근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문국진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발간, 피해자가족모임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예방·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

고문피해자 문국진(3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공판이 23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11월18일 첫공판이 열린뒤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지난 1차공판에서는 국가소송 실행자로 지정된 청량리 경찰서 형사3명이 출석했으며 문국진씨에 대한 정신·신체감정 신청이 채택되었고, 증인으로 치료담당 의사 배기영씨를 신청, 채택되었다. 그뒤 문국진씨는 93년 12월27일부터 94년 1월12일까지 연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남궁기씨로 정신신체감정을 받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배기영(신경정신과 전문의)씨가 93년 9월13일 낸 소견서에 따르면 문국진씨의 병명은 '고문후유증'이나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되어있다. 한편 작년 10월13일 시작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

임」(대표 박정기)은 고문피해자가족좌담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는 피해자가족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공유, 공동 사업을 진행시키고, 법적 대응과 치료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게 되는데 이후 '고문피해자가족모임'으로 출발을 구상중이다. 좌담회 이후 고문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1천2백명 연대생들의 서명과 피해자가족 서포터들의 배기영씨를 신봉, 채택되었다. 그뒤 문국진씨는 93년 12월27일부터 94년 1월12일까지 연대부속 세브란스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남궁기씨로 정신신체감정을 받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배기영(신경정신과 전문의)씨가 93년 9월13일 낸 소견서에 따르면 문국진씨의 병명은 '고문후유증'이나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되어있다. 한편 작년 10월13일 시작한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와 고문의 예방, 이의 제도화 필요성을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기자회견

「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반대투쟁위원회」는 21일 오전 11시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원진레이온 생산설비의 중국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기술자 1백여명이 입국, 원진레이온 생산설비의 해체작업에 들어가 곧 이 설비를 중국으로 이전하려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유독가스의 배출로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근로자들에게 직업병을 유발시켜 폐업되기 이른 원진레이온의 설비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원진레이온 설비를 인수한 나전모방과 정부는 중국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설비를 즉각 폐기처분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뒤 중국대사관을 방문, 원진레이온 생산설비의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진그룹해고노동자 면담요구, 연행돼 즉시판결

한진그룹 조양호(대한항공 사장)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던 한진그룹 해고노동자 안경호(한해투 의장, 한국공항)씨등 7명이 경찰에 연행돼 즉시판결을 받았다. 20일 오전 6시 40분경 조씨를 찾아간 해고노동자 7명은 면담을 요구하며 집앞에서 대기중 8시20분경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강제연행을 됐으며 연행과정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다. 서대문경찰서측은 "도로교통법위반", "경범죄"등의 사유로 조사를 벌인뒤 즉시판결을 넘겨져 안경호씨등 2명에게 구류 5일, 임창수(한진중공업)씨등 5명에게 구류 2일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는 항의방면에 서 경찰의 폭력·강제연행에 대한 공개사과와 연행자 전원석방을 촉구했다. 명단: 나현균(코리아티코마), 안경호 이상 구류5일/김철식(대한항공), 조기선(한진건설), 박성호, 임창수, 강수열(한진중공업) 이상 구류2일

방사성폐기물 반대시위 집시법 위반혐의 구속

울진지역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반대시위를 벌였던 전덕수(25)·전중석(27)·박성준(30)씨 등 3명이 20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울진경찰서에 구속됐다.

◆ 알 림 ◆

- 노동인권보고서 제4집 출판기념회 및 소장 이·취임식
·일시 : 6월 22일(수) 오후 6시30분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858-5837, 8)
-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 고심
·기간 : 6월 22일~7월 16일
·장소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교육관 2205호
·주최 :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전국철거민연합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서울시 철거민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철거민 단체를 망라한 「전국 철거민연합」이 23일 발족한다.

「전국철거민연합 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종로공원에서 창립대회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철거민연합」은 무주택 철거민에게 공영임대주택을 분양할 것과 입주전까지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철거민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는 “전국의 철거민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지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당국에 촉구하는 등 철거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정권 진보적 국제관계 교실 6/22-7/16

민중정치연합은 국제문제를 대중화하고 국제활동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단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 교실'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교육관 2205호실에서 연다.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9개 강좌로 이루어지는 '국제관계교실'은 민정권 국제국에서 주관하고 대학생, 국제연대활동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을 주대상으로 한다(일정 및 내용 하단).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위한 하루주점

25일,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회장 권오현)는 오는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만남의 집, 벽돌쌓기' 행사를 갖는다. 25일 정오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호프에서 열리는 이번 일일주점 행사를 통해 모아지는 성금은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 사는 출소장기수들의 거처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수많은 후원회원의 정성과 나라안팎의 독지가들에 의해 서울동 수도권에서 봉천동, 낙성대, 민중당계원, 대전 사랑의 집들이 만들어졌으나 지방에서는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양심수후원회는 지난 88년 12월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면서 출소한 1백여명의 출소장기수, 감옥에서 여전히 옥살이 하고 장기수동을 지원하기 위해 89년 3월 결성됐으며 현재는 9백여명의 후원회원이 다달이 회비를 건어 양심수들을 방문해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하고 석방된 양심수들에게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765-5282, 763-2606).

94년 전국교육대회 7/9, 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7월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간 '94년 전국교육대회'를 대전가톨릭교육회관에서 연다.

이번 교육대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캠페인 전략수립, 사형제도 문답법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인도네시아 캠페인은 94년 상반기의 콜롬비아 캠페인에 이어 국제엠네스티 전체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인도네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스트 티모르의 대량학살,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노동권 침해 등이 주요이슈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엠네스티 회원, 후원회원은 물론 인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도 참가가 가능하고 교육대회 당일에 직접 대회장소로 가도된다. 문의 : AI 한국지부: 053-426-2533 / 대전가톨릭농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세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민회관: 042-624-5662

“학생을 폭력범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가협, 대규모구속에 성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는 21일 대규모 학생구속사건과 관련한 입장발표에서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폭력범으로 매도하지 말고, ‘비문민적’인 학생운동 탄압과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가협은 “문민정부들이 ‘최대구속’이라는 용어는 선정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인신이 구속되는 불행한 사대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실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총련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자 학생들을 폭력범으로 모는 등 정치적 비판자를 매장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민가협은 “많은 학생들이 구속·수배당하는 현실의 일차적인 책임은 집권층에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시위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른들의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가협은 또 “마구잡이 구속상태에서 무고한 학생들이 감압상태에서 허위진술로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고, 부상당한 학생들까지 수갑과 포승줄로 묶여 외부와 차단되고 감압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민정부가 다시 공안시대로 되돌아 가고 있지 않은지” 개탄했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철도·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 전노대등, 대책없는 강경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전기협과 교섭창구 마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대표 권영길등),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장복) 등은 22일 기자회견, 성명 등을 통해 “성실한 대화로 ‘교통대란’을 막기보다는 3%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고수, 철도·지하철 파업시 수송대책 등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하철공사노조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철도·지하철의 총파업은 예비군 수송차량, 전직기관사의 대체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산업에 막대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고 전국의 주요도시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그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견에서 지하철공사노조는 “전기협은 누차 철도청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

기보다는 4부합동 담화문을 통해 강경대응만을 되풀이하며 총파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은 22일 성명에서 “정부와 지하철공사가 성실히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전기협 간부 구속 등 강경대응할 경우 철도·지하철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위기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또 “정부는 이번 쟁의에서 밀리게 되면 이후의 쟁의에서 정부와 사용자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안세력의 정치적 논리이고 민주적 노사관계수립이라는 시대의 요청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공사노조는 “파업을 막는 길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에게 과감한 개혁을 약속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 이전이라도 철도노동자들의 결박성

적권중재회부요청으로 23일부터 7월 15일까지 ‘냉각기간’에 들어감에 따라 규정준수 운행을 할 경우는 불법행위로 간주돼 법적인 처벌대상이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쟁의행위인지는 다른 쟁해가 있을 수 있다”며 “직권중재가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적돼온 마당에 ‘냉각기간’ 때의 쟁의행위를 문해상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노대도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대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3%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의 철폐와 직권중재의 철폐, △철도노동자중기관사와 검수원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전기협과의 교섭창구 마련을 촉구했다.

재일교포학생 폭행사건 방지를 위한 대회

24일 도쿄조선문화관에서

재일동포학생들의 민족적 박해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조선학교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회」는 24일 오후1시 도쿄조선문화회관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사건의 방지를 요구하는 재일조선어머니중앙대회’를 연다. 어머니회는 “민족적 박해사건이 급증되면서 우리 동포의 민족적 의분은 물론 많은 양심적인 일본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전했다(본지 제188호 참조, 연락처: 81-3-3816-4346).

◆ 알 림 ◆

- 김삼석·김은주씨 결실공판 ·일시 : 6월 23일(목) 2시/ ·장소 : 서울고법 303호
-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2차공판 ·일시 : 6월 23일(목) 10시/ ·장소 : 서울민사지법 559호

특수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가 특수교육심사위 시·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등 요구

지난 8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모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을 축소할 데다가 예산부분 축소의 내용마저 담고 있어 통합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스른 처사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제정된 17년만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7월1일 시행을 불과 20여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일반적으로 20일간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14일간으로 축소를 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의견제출 마지막날인 22일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공동위)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제4조 각급학교에 특수교육심사위원회(예전 판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나 이는 예초장애아동이 학교취학에 걸림돌이 된 것이므로 '시·도'에만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했다. 또한 시행령 5조에는 무상교육의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한 뒤 '급식비, 통학버스비, 기숙사비'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조 '배치에 대한 이익'에 있어 학생정원 초과나 교육시설·설비등의 이유로 학교측이 학생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통합교육이념을 실현키 어렵고 완전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명시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즉, 제8조 '특수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로, 제15조 '특수학교등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를 '배치해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위의 의견서 제출에는 윤점룡(전주우석대 특목교)교수, 김병하(대구대 특목교)교수, 이영자(충남장애인부모회장), '올바른 장애인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등이 참가했다.

부산지역 인권단체 협의체구성 논의중

부산지역에 있는 「한교협 인권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등이 협의체 구성을 논의중이다. 부산불교인권위의 박동범간사는 "같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진노동자의 삶 담은 원진이력서 2판발간 예정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삶을 생생히 담은 『얼룩진 원진레이온 이력서』(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 펴냄, 3천원)이 5월25일 1판 3천부를 찍어낸 데 이어 곧 2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1백44페이지에 이르는 원진이력서는 원진레이온이 36년간 걸어온 길, △산업재해 실태, △직업

병환자 실태, △88-93년까지 원진레이온 폐업투쟁사,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 활동, △원진노동자들의 추모시 등이 담겨 있다(문의: 0346-63-3645).

'고난모임'

23-24일 실무간사 수련회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23, 24일 양일간 실무간사 수련회를 갖는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조직강화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발달장애아 행동수정 사례연구 발표회

25일 1시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아행동연구소」(소장 정보인, 장애아연구소)는 오는 25일(토)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발달장애아 행동수정 사례연구 발표 및 비디오 상영회」를 신촌 세브란스병원 102호실에서 연다. 93년 12월부터 94년 6월까지 장애아연구소에서 지도한 아동들의 사례를 종합 분석해서 △자해행위등의 행동교정에 대한 사례, △행동이 부산하고 통제가 어려운 아동의 사례, △놀이기술 및 교과학습지도에 관한 사례를 연구, 발표한다. 또 사례발표에 앞서 정보인 소장이 '행동수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실시방법'을 소개한다.

「발달장애아행동연구소」는 지난 93년12월에 설립, 지능저하와 문제행동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들에게 심리치료를 일한인 행동수정법을 주로 사용하여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놀이, 학습기술 등을 지도 연구하고 있다(문의: 587-9370).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 반대 123차 정대협 수요시위

22일 12시 123차 정대협 수요시위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주관으로 안국동 일본대사관앞에서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일본이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내놓은 아시아교류센터 기금안에 대한 규탄과 함께 정신대 피해배상은 개인배상으로 되어져야 한다고 힘껏 외쳤다. 또한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없는 일본의 태도에 분개하며 이는 명백한 범죄요, 인권침해임을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뒤 20여명의 풍물패를 앞세우며 거리홍보를 펼쳤다.

기지촌 여성문제 교육 미군범죄근절운동 여성인권위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혜)는 여성위 위원들의 기지촌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기지촌 여성들의 상담 사례, 혼혈아동문제, 에이즈 문제,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미국에 건너가 겪게 되는 고통스런 현실 등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교육받기로 하였다.

일시와 강연자는 다음과 같다(장소는 미정). 7월 12일 2시-여성인권위 위원장 이성혜 / 9월 13일 2시-송탄 참사랑 쉼터 대동을 교정하는 놀이, 학습기술 등을 지도 연구하고 있다(문의: 587-9370).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 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철회 요구

'신공안정국' 업고 철도·지하철 파업몰이 의혹

철도노조의 교섭위원으로 전기협 간부의 참여를 통한 단체협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한가닥 평화적 해결의 길이 보이던 철도·지하철 동시 파업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끝에 몰렸다.

경찰은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전기협은 23일자로 이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 서울지하철공사노조도 24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전기협에 공권력을 투입한 여진은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지하철노조가 23일을 기해 규정준수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은 이날 새벽 4시를 기해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 전기협) 소속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9개 시도 14개 장소에 50개 중대 6천여명을 투입, 서울동차사무소에서 농성중이던 전기협 부위원장 박상수씨등을 포함 6백23명을 연행했다. 또 경찰은 전기협 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철도청은 전기협 간부 30여명에 대해 사법당국의 법적처리와는 별

도로 징계위에 회부, 파면키로 결정했다. 전기협은 23일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경찰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파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전기협은 사태해결을 위해 △연행자 석방과 공권력의 즉각 철회, △전기협과의 실질교섭,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재희 노동부장관이 전노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전기협 간부에 대한 고소취하 및 전기협과의 실질대화 등을 촉구하였다.

재판부, 고문행위자 적시 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

문국진씨 고문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2차 공판이 23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부장판사 조흥은)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문씨의 소송대리인인 백승현변호사에게 고문행위자와 발행시

구호의무자, 발행일을 제시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변호인은 배기영(동교신경정신과 원장), 문재호(문씨 부친)씨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류되었다. 다음 공판은 7월 14일 2시 민사지법 559호.

언론의 남총련 폭력배 만들기 규탄 인가협 목요일집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은 23일 오후 5시 탑골공원 앞에서 40차 목요일집회를 열어 남총련등의 대량구속에 대해 규탄했다. 태재준(전 전대협위원장)씨의 어머니등은 "부모에게 마저 수갑을 채운채 접견을 시키기도 한다"고 폭로하고, "언론이 '혼연일체'가 되어 '남총련 폭력배 만들기' 작업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태도를 비난하였다.

한교협 인권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27-28일 인권운동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가 '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교협 인권위 20주년 기념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충남 양양제일관광호텔에서 연다.

전, 현직 인권위원들이 참가하는 인권선교정책협의회는 민주화 개혁에서 인권운동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와 긴급한 인권현안중 정신대문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주한미군범죄, 성폭력 문제 등에 대한 사례보고도 이어진다.

이번 인권선교정책협의회에서는 또 최근 사회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남총련등 학생에 대한 대량구속, 전국기관차협의회등의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또 전, 현직 인권위원이 모두 모여 한교협 인권위 20년을 회고하는 '20주년 기념 축하모임'도 가진다.

대토론회-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

발제 1	민주화 개혁과 인권운동의 전망	조희연교수
발제 2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	박원순변호사
발제 3	새로운 인권선교와 기독교의 책임	임태수교수
논찬 1	오재식(크리스찬아카데미 부설 사회교육원 원장)	
논찬 2	조화순목사(달월교회, 인권위원회 감사)	

질의응답

○ 국제 인권 소식 ○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중심적인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

남쪽 지역에서 민중중심적인 발전대안(People-Centered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the South)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남아공의 포트 하레(Fort Hare) 대학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냉전이 끝난 후 새롭게 대두된 신국제질서에서 국제관계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민중연대운동의 활동과 전략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네바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남쪽지역 과도위원회(Interim South Group Committee, 이하 ISGC)에 의해 개최되었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지난 10년간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하면서 그동안의 과도체제를(Interim) 보다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직하게 되었다'고 ISGC의 대표인 시부시소 뱁구(Sibusiso Bengu)박사는 개막연설에서 개최배경을 설명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각각 10명, 북미에서 3명, 제네바에서 3명, 남아공에서 약 30명 등 전세계 약 30개국에서 약 75명이 이번 회의에 참가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NUCH 후신)가 초청을 받아 인권운동사랑방의 이성훈씨가 참가하였다.

첫날 개막식에서 남아공의 문교부장관인 시부시소 뱁구(Sibusiso M. Bengu) 박사는 "음으로 양으로 AN-C의 아파르테이트 반대투쟁을 지원하고 동참해온 전세계의 양심적이고 진보적인 단체의 대표를 한자리에서 만나 너무 기쁘다"며 벨슨 만델과 남아공 대통령을 대신하여 환영의 인사를 하였다. 그는 또한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시혜적이었음 비판하면서 이제는 남남(south-south)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이며 역사적인 첫 발걸음이 지난 6주전의 선거에서 ANC가 승리함으로써 이미 디터쉴라가 말했다(개막연설이 예정되어 있던 만델라 대통령은 아프리카당결기구의참석차 불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된 본 회의에서 전 ANC 대변인이자 현 국회의원인 사키 마코조마(Saki Macozoma) 씨는 최근 유행하는 신국제질서(NWO)가 냉전에서 승리한 북쪽 자본주의 세력이 승리감에 도취해 만들어낸 말이라고 비판하면서 제3세계의 입장에서는 신(New)국제질서가 아니라 강요된(Reinforced) 국제질서라고 하면서 남아공의 관점에서 본 신국제질서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어 브라질 출신의 경제학자이며 세계은행에 대한 민간단체(NGO) 실무위원회의 간사인 마르코스 아루다(Marcos Arruda)씨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93년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을 근거로 한 국제화경향과 함께 나타난 특징을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 '초국적기업의 확산', '실업률 증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요약 설명하면서 교목에서 새순이 돌아 나뉘는 남아공, 브라질,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이 계속 실험·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5명이 각각 각 대륙을 대표하여 약 15분간 최근 국제화 경향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 사회적 경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5명이 각 부문별 즉 농민, 노동, 여성, 어민, 청년학생층에 국제화가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각 부문운동의 대응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다음날(14일)에는 '국제정치경제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국제화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각각의 강연을 오전에 듣고 나서 오후에는 '일본과 제3세계', '구조조정과 가난계거', '팔레스타인의 청년상황', '국제연대 건설'의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분과 모임을 가졌다. 이후 전체회의에서 짐바브웨 출신의 경제학 교수였다가 지금은 노조자문위원으로 일하는 야쉬 탄돈(Yash Tandon)씨는 세계 정치경제의 흐름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나서 '멕시코 치아파스 농민봉기에서 보듯이 나프타(Nafta)처럼 거대해 보이는 국제경제체제도

의외로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강요하는 국제화의 흐름에 대한 지역적(locally), 국가적(National), 국제적(International) 차원의 투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 마지막 날 그동안의 발표와 토론의 내용을 담은 최종선언문이 제출되었는데 참가자 일부가 '선언문에서 국제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 부정적이고 일면적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전체이름으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결국 추후에 참가자들의 평가를 토대로 다시 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ISGC의 사업과 일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구중심의 민간단체(NGO)와의 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국제연대활동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고 발전문제와 보다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노동, 농민 등의 민중조직(People's Organization)이 적극적으로 남남연대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각 대륙별로 나누어서 향후 연대의 틀을 구성하는 문제를 논의한 결과 사무국을 포트 하레 대학에 두고 각 대륙별로 각각 1명의 연락조정자 뽑아 구체적인 미래의 사업을 추진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전국농민운동연합(KMP)을 대표한 프란치스코 파스쿠알(Francisco Pascual JR)씨가 선출되었다. 한편 내년에는 이번 회의와 앞으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비슷한 규모의 국제회의를 열어 보다 많은 기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번의 이런 흐름에 대해 이성훈씨는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일부 민간단체가 민중의 이익보다는 재정 지원을 하는 서방 정부와 민간단체의 요구에 맞추어 일을 함으로써 민중의 신뢰를 잃고 타락 또는 체제순용화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NGO와 PO의 균형있는 참여가 갈수록 절실히 요구되는 추세'라고 말하였다. 그는 덧붙여 '갈수록 발전(Development) 모델을 둘러싼 남북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권, 환경, 여성운동에 비해 국제연대운동을 '소홀히'한 노동, 농민 등 우리나라의 기층민중운동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연대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편집주 : 전기협과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뜻을 비추던 정부는 23일 새벽, 전기협 사무실에 진입, 철도청의 근로기준법 준수, 8시간 노동제 실시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였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가운데 '신공안정국'의 두번째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기협과 전노대의 긴급성명을 전제한다.

▶ 전기협 비대위 성명 ◀

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안전한 철도,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온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올 년초부터 철도청의 비인간적 경영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강그리 무시한 채 탈법적으로 실시돼 온 변형근로 근무제도, 해고 동지의 원직복직, 그리고 안전 철도를 위협하는 철도청의 안일함에 맞서 해고와 구속의 희생을 각오한 투쟁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에는 각종의 난관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관료주의에 빠져 현업직원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공무원이 어찌하니, 사회가 혼란된다는니, 조용히 있지 않으면 징계를 하겠다느니 하면서 강권과 강압으로 일관한 철도청,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복핵 공방을 내세우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왜 난리나며, 철도노동자의 공개적이고 민주적 조직인 전기협을 불법·불순세력으로 몰아부치며, 강경구속 방침만을 되풀이하며 탄압 일변도로 행세한 문민(?) 정부.

3만 조합원의 거대노조이면서도 조합원의 의사와 뜻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용자의 뜻 받들기에 급급하여 조합원을 폭력세력으로 매도하며 철도청과 구합이 맞아 현장 조합원을 협박하고 탄압하는 데 광분했던 불쌍한(?) 철도노조.

너무도 당연하고 소박하여 이미 한이 서려버린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투쟁의 의지에 가해진 이들의 행태는 이미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철도파업의 극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6월 23일, 바로 오늘 새벽, 폭력 경찰을 앞세운 야수적 공권력은 하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호소하던 우리들의 정성이 모인 농성장을 난입하여 동지들을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연행하였고 진입에 성공했다는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의 일터를 봉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듯 민주와 개혁의 가치를 내걸었지만 실체는 몰상식과 폭력으로 치장된 정부의 탄압과 부딪히면서 우리의 최소한의 우리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자구책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파업투쟁을 결행해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힘없는 노동자가 저 거대한 권력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파업투쟁 이외에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혹자는 철도파업이 국민의 발을 불모로 한다,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우려하며 걱정합니다. 우리 철도노동자들도 우리들의 파업투쟁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이 겪을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

에 최대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철도청과 공식적으로 대화할 것을 요구했고, 교통부·노동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표에게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여 줄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가치없는 권위만을, 형식에 역매이는 편협함만을 내세운 정부는 철도청을 통해 소위 "철도 현업직원 처우 개선 대책"이라는 걸만 요란할 뿐, 열악한 노동현실을 더욱 왜곡하고 개악하는 기만적 발표로 철도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더니 급기야 야수적 폭력경찰을 통해 우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력을 자행하고야 만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순박하지만 폭력에 굴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진게 없지만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불의에는 당당히 맞서 싸울 정의감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고충에 미안함과 가슴 아픈 마음을 감출 수 없지만 공권력의 폭력에는 총파업 투쟁으로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노동자로 태어나 부끄럽지 않는 총파업 투쟁을 결행하면서 국민여러분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994년 6월 23일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기관차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 전노대 긴급 성명 ◀

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유도한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

정부는 22일 밤 전기협에 처음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전기협이 23일 만나자고 했는데 왜 묵살했는가?
이는 위장된 대화 제의가 아닌가?

정부는 철도와 지하철 파업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를 촉구한 전기협과 전지협 및 전노대의 노력을 묵살하고 마침내 23일 새벽 철도기관사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 기관사 사무소에 경찰을 투입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파업을 유발시켰다.

이는 정부당국이 당초부터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철도와 지하철 파업을 유도하는 음모에 따른 계획된 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전기협과 전지협 그리고 전노대는 정부 공안파들의 이 같은 기도를 간파하고 23일 최후로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당국은 전노대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이 전기협에 처음으로 협상을 갖자고 요청했었고 전기협은 집행간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관계로 최대한의 빠른 시간안에 비상집행회의를 열어 23일 오전에 협상장소, 방법들을 알리겠으며 서선원 의장동의 신분 보장을 요구하라는 답신을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전기협의 24일 대화 요청을 묵살 23일 새벽 공권력을 발동, 기관사들을 파업으로 몰아넣었다. 전노대는 정부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와 철도와 지하철 파업을 이용,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민주노동운동연합을 분쇄하려는 문민을 가장한 김영삼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이미 여러차례 밝혀온대로 총력전을 전개할 것이다.

1994년 6월 23일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중앙노동위·서울지하철에 직권중재 통고

지하철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경찰의 전기협노동자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고발

중앙노동위원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공사노조에 설정법상 단체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중재통고를 하고,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철도·지하철의 '불법파업'을 엄단하기로 결정하는등 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사용자의 밀어부치기가 계속되고 있다.

또 전노대 간부 내사를 해 온 검찰은 이들을 곧 연행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24일 서울지하철 파업과 관련해 김연환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4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농성장에 공권력투입도 고려중이다. 또

부산교통공단노조 파업시 강한규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10여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전기협·지하철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24일에도 고대, 동국대, 기독교회관 등지에 집결.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를 거부하는등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위원장 김연환)은 지하철공사측의 복귀명령에 대해 "임투에서 내세운 노조측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노조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지하철공사가 정부당국의 지시에 추종하다가 자율성을 상실했

다"며 "정부가 전기협에 공권력을 투입한데 대해 사과하고 구속·수배 중단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위원장 강한규)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단측이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무시할 때에는 25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노대는 24일 '비상대표자회의'를 갖고 구속된 철도기관사 전원석방등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연대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노대는 회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기협 농성장 난입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경찰투입에 책임지고 내무장관 퇴진 △철도파업 관련 구속자 즉각 석방과 사전구속영장 철회 △지하철 직권중재 철회와 전기협을 교섭상대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또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찬반투표를 마치고 냉각기간이

끝난 현대중공업 등 30개 사업장의 즉각 연대파업에 돌입하고, 기아자동차등 정의발생신고를 한 68개 사업장은 즉시 파업찬반투표 실시할 것 등을 밝혔다.

「철도·지하철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창복, 이영순등)는 24일 전기협 노동자 연행과 관련해 최형우 내무·오명 교통부장관, 김화남 경찰청장, 최훈 철도청장 등을 불법연행 및 철도법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합법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영장없이 이들을 연행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피고소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노동자들을 연행한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연행·감금해 철도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철도법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공공운수노조와 프랑스 노동총련은 전기협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공식노총에 속한 유일한 노조만을 인정하는 독점노조체제는 국제노동기구 조약 87호에 위반되는 것이며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단체교섭권, 조합원을 옹호하는데 필요한 노조의 권리와 수단을 생취하려는 노력에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

전기협 탄압규탄 노동자·시민대회

6월 25일(토) 오후3시 종묘공원

철도·지하철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행사 안내 ◀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촛불대행진

- 일시 : 6월 25일(토) 오후 5시
- 장소 : 종묘공원
-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공청회-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

- 일시 : 6월 27일(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강당
- 주최 : 서울대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문의 : 269-5763~5

□정책토론회-장애인 인권, 어디까지?

- 일시 : 6월 28일(화) 오후2시-5시
-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521-5364)
- 주제 :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 인권
- 주최발표 : 김병후(인의협, 연희신경정신과 원장)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사청문회 반대론 반박>

△국회법에 따라 인사관련된 사항

편집주 : 편본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근거와 인사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의 근거>

가. (1)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헌법 104조 2항)는 법규정의 취지는 국정의 비판·감독기능을 가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하게 하는데 있다. (2) 헌법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국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대법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어 국민에게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자질과 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국회는 사법행정작용인 법관의 유효적절한 배치에 관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제정된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임명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나. (1) 국회는 "국정감사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고(헌법 61조 1항) "제적의원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로 하여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1항). (2) 국회법 제65조(청문회)에는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정한 안건 인사청문회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국정의 비판, 견제기능이 국회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다.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의 경우 대법관임명시 어떤 방식으로든 국회가 대법원의 구성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굳이 우리의 경우처럼 '국회의 동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 우리와 같이 대법관에 대한 제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임명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2) 현행 법체제로 인사청문회가 가능하지만 더욱 이를 명백히 하기위해 국회법을 개정해 65조 2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면 인사청문회를 즉각 시행할 수 있다.

은 토론절차가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불가능.

=첫째, 국회법에는 위의 규정이 없고, 이는 단지 과거 권위주의체제의 그릇된 관행에 의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아무런 토론절차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뿐이다. 둘째,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112조 제5항)는 국회의 동의절차와는 무관한 표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대법관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소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

=대법원구성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두거나(국회법 44조, 82조), 법제사법위원회(국회법 37조 1·2항)에서 위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를 열어도 토론문화의 부재로 제정된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흠집내기로 악용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고 국회를 멸시하는 태도일 뿐 아니라 술한 인신공격에도 한치의 흠도 감하지 않을 정도의 높은 도덕성을 대법관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인사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독립과 권위가 높아질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유독 대법관에게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첫째,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직속된 행정공무원이고,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데 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헌법이나 법률상,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별된다. 둘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된다. △대법관후보자는 증인이 아니기에 국회에 소환할 수 없어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

=청문회제도의 법적 취지 및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대법관 후보자들이 소환요청을 받을 때 자발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후보자들에게 인적사항 질문표를 발송, 제출케 한다. 또한 이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소환하면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반대한다.

=신임 대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후임대법관 임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가능하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로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자료를 발표하고, 국회는 청문회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세부적인 인사청문회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법관 임명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제안>

가. 대법원장은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대법관추천 자문기구 구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서 동의요청된 대상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상한 신상자료를 첨부해 대법관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나. 국회는 대법관임명동의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특위를 구성한다. 동시에 법사위나 특위는 대한변협이나 법학교수협의회에 제청된 대법관들에 대한 평가작업을 의뢰하고,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는다.

다. 법사위나 특위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제청된 대법관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인적사항질문표를 제출받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소환한다.

라. 법사위나 특위는 수집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심사한 뒤 종합보고서를 작성, 본회에 보고한다.

◆ 알 림 ◆

이번주 단체탐방은 쉽니다

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하루주점

만남의 집 벽돌쌓기

6월 25일 12시-24시 대학로 마로니에 호프

수십년만에 흰머리 주름진 얼굴로 세상에 안겼지만, 남은 인생을 핏줄 하나없이 힘겹게 살고 계시는 장기수선생님들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벽돌쌓기에 힘을 모읍시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765-5282, 763-2606)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잊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할 때

KNCC 인권위원회 20주년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의 주제로 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 인권선교정책협의회를 27-28일 온양제일관광호텔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오후2시 개회예배로 시작된 인권정책협의회는 2시 40분 대토론회로 이어졌다(2면 참조).

토론회에는 조희연(성공회신대) 교수가 '민주화 개혁과 인권운동의 전망'을, 박원순 변호사가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을, 임태수(호서대학) 교수가 '새로운 인권선교와 기독교의 책임'을 발표했다. 뒤이어 논찬에는 오재식(크리스찬 아카데미 부설 사회교육원) 원장, 조화순 목사 등이 참여했다. 또한 사례보고는 △정신

대문제(권희순 목사) △외국인노동자문제(김해성 목사) △추한미군범죄근절운동(조재학 주한미군범죄근

절운동본부 간사) △성폭력문제(박상희목사)로 나누어 논의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2시30분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여성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의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이종길 변호사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대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과 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형사책임 처벌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성희롱의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노동법상의 문제인 동시에 성차별 금지라는 헌법상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역시 직장내 성희롱을 고용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노동의욕 저하 등의 영향을 주어 안전 작업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지침서에서는 "노동부와 각 노동위 또는 정부2장관실내 여성고용문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그 아래 직장내 성폭력 전담기구와 신고센터를 설치, 구제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 등 성폭력 예방과 벌칙조항을 두며, 연수시 직장내 성폭력 문제를

노동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토론에서 이봉화(정무제2장관실) 사무관은 대책마련으로 △직장내 성문화 실태조사 △여성단체활동 장려, 지원 △자료집 발간등을 약속했다. 최(노동부 부녀소년과) 사무관은 현재 성희롱에 관한 정부역할을 논의중이며 사용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채운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성희롱의 문제를 성교육에 대한 학교교육의 부재와 색스문화를 조장하는 정부정책,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용자측의 문제를 들었다. 대책에 있어 그는 교육·문화·노동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남녀고용평등법등 목적에 충실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 기사란 교회협 경찰난입 규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공동의장 허명섭·백남운, 기사란)은 27일 오후5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사무실에서 '교회협 난입규탄 및 철도·지하철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오후 8시에는 KNCC 경찰난입 규탄집회를 2층강당에서 열었다.

기사란은 성명서에서 공권력 만능시대로 회귀하는 징조라며 △연행, 구속 노동자 즉각 석방 △공권력 남용과 교회협에 대한 경찰난입의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철도·지하철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공 판 안 내 ◀

□6월 28일(화)

- 이순심씨사건, 9시30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 두밀리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
- 조준회,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1회
-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지법 311호, 2회

□6월 29일(수)

- 김태일의4,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
- 최영익, 국보법,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 마광수의, 음란문서제조, 11시, 서울지법 418호

□7월 1일(금)

- 최은하, 국보법, 11시, 서울지법 423호, 선고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 (요약)

새로운 인권운동의 실천방안 박 원 순(변호사)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가를 계기로 인권개념의 보편성과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 변화는 종래의 인권개념의 확대, 인권운동의 전문성 확대와 대중성 강화, 국제적 연대활동의 자각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인권'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권리이다. 경제적 권리는 개별 국민의 일정한 사회적 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대한 권리, 의료시설 이용의 권리, 교육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권리는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철폐와 그들에 대한 보호의 요구등이다. 서방국가들은 경제적 권리에 우위를, 사회주의권에서는 사회적 권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이 두 권리는 상호 연관성과 보완성을 지니며 이밖에도 '제3세계' 인권의 개념이 분화, 발전되어 왔다. 원주민의 권리, 민족자결의 권리, 개발에의 권리, 식량과 자원에의 권리 등 주로 인종과 종족, 민족이라는 큰 집단의 권리이다.

우리 사회에는 방치된 인권의 영역이 너무도 많다. 정치적 인권에 대한 개선의 조짐이 뚜렷한 상황에서 일반시민의 인권으로서의 관심 전환은 필연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 도시빈민, 아동의 권리등에 대해서도 너무 무관심했다.

이제 인권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여 제기해야 한다. 여성인권의 경우 성희롱사건이나 입사원서에 신장, 용모등을 적도록 하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고발한 사례등이 그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법률'은 부도덕한 정치권력의 국민에 대한 탄압의 수단이었지만 이 법률을 근거로 여러 종류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쟁송함으로써 법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단순한 사건은 소송제기, 고소·고발의 조직화된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관심 고조와 확대를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구

체적인 사건에는 학자들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안이 따라야 한다. 인권침해의 폭으로 침해양상과 배경, 대책이 마련되고 입법으로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적 쟁송의 제기, 학문적 뒷받침, 대중화 작업이 3박자를 맞춰야 한다.

끝으로 세계의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고통을 나누는 '품앗이'가 요구되는데, 그속에서 우리는 다른 곳의 인권을 향한 저항과 투쟁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새로운 인권선교와 기독교의 책임 - 민중과 연대하는 인권선교- 임 태 수(호서대학 교수)

지난 20여년동안 군사정권하에서 한국의 인권운동을 주도해온 NCC 인권위원회는 이제 인권선교를 다른 주제, 다른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 NCC가 추구해 나가야 할 인권선교의 방향은 '민중과 연대하는 인권선교'라고 본다. 이제부터는 민중들이 그 혜택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14개의 인권선교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1.법률 개폐추진: 법률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악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폐하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2.감시자 및 조인자 역할: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을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나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강구해야 한다.

3.올바른 대통령, 국회의원, 지역의원, 지방자치장 등이 선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4.교회정화운동:NCC는 한국교회의 부조리를 체계적으로 연구, 시정하고 정화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5.특수목회지원:도시빈민교회와 단체, 민중교회, 고도소목회, 군선교, 장애인교회, 윤락여성을 위한 단체와 시설통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끌어안아야 한다.

6.농촌/중촌교회와의 연대활동 7.결손가정의 아이들,고아들,해의입양아들 8.노인문제 9.낙태문제 10.여성차별/폭력문제 11.외국노동자 12.한국교도들/복음교도들/복한교도들 13.국제적인 인권문제 14.자연보호 보존 이러한 인권문제는 여러 교단과 시민운동단체들, 심지어 정부기관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NCC 비가맹교단들이나 단체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개혁과 인권운동의 전망 조 희 연(성공회신학대 교수)

우리의 인권개념이 주로 국가권력에 권력에 의한 신체적 구금이나 고문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현시기 인권운동은 대단히 확대된 지평위에 서야 한다. 인권운동은 "우리 시대의 소수자(minority)가 누구인가"하는 물음에서 시작된다. 이 소수자가 노동자·농민 등 민중이라면 그 민중이 서있는 사회경제적 콘텍스트는 변화하였고 민중의 삶을 질곡시키는 문제들은 다 변화·중화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의 내용으로 '한국사회가 절대빈곤의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이행하였다'는 점, 민간정권시대로 이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실질화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 범지구화와 지식정보사회적 특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변동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우리사회의 풍요가 여전히 크나큰 계급적 불평등을 내포하면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과 이 풍요를 어떻게 올바르게 향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복지적 요구의 충족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의최소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의 실질적 강화는 이 시대 인권운동이 실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군부정권타도라는 구호속에 가려졌던 많은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하고 따라서 토지·주택·세금·교육·교통·사회복지등 인권운동의 관심영역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범지구화는 인권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국내에서 확산하고 그것을 국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은 이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단체들간의 국제적 연대가 증대되고 국제적 네트워크가 강화되면 필수로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변동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싸우고, 가장 작은 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인권행진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예정
사회권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 이하 A규약)의 가입에 따른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Initial Report)에 대한 국내 인권단체의 반박보고서(Counter Report)가 6월 27일 제네바 유엔인권센터의 A규약 사무국에 공식 접수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A규약 사전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에 참석하기 위하여 직접 보고서를 가지고 지난 26일 제네바로 출국한 인권운동 사랑방의 이대훈씨에 의해 알려졌다. 반박보고서 작성의 연락 및 실무간사인 이대훈씨는 "이번 회기에서 한국을 비롯한 홍콩, 아르헨티나 등 5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반박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한국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반박보고서가 A규약 실무소위 관계자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어 공식 심의문서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유일한 NGO 참석자로 공식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는 6월 28일 오전 약 1-2시간 동안 반박보고서에 대해 구두로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결들일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실무소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NGO의 참여를 허락한다. 5인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6월 27일 시작된 5일간의 회기 중에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의 정부보고서를 검토하고 올해 11월에 정식으로 정부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정부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결과에 따라 A규약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A규약의 완전한 실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필요한 권고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권고안은 비록 한국정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한국정부는 A규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A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내의 제반 인권상황을 개선해야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첫날 A규약 실무소위의 위원장인 필립 올스턴(Philip Alston) 교수(호주 국립대 법학)는 이번 회기에 유일하게 제출된 한국의 반박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이 반박보고서로 A규약 위원회가 각 나라에서 A규약에 관련된 구체적인 인권상황에 집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NGO)의 협력이 A규약의 일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주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정

부의 보고서 검토 및 대정부 질문지 작성은 외장인 울스턴 교수와 튀니지아출신의 अबد사타르 그리사(Abdessatar Grissa)교수가 담당하고 있다. A규약에 관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전노대, 노동정책연구소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구속영장 철회등 요구

28일 사당역 구내에서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10여 명이 질식사한 것과 관련,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정부의 탄압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여러경로를 통해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열차를 무리하게 운행한 정부당국과 공사측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매일 있어야 할 차량과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와 보수가 5일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전기, 설비 등의 고장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로가 누적된 대체기판을 통한 열차운행 중단 △정비·보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차운행 중단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운행을 위해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교조, 민변, 장애우권의 문제연구소, 노동과 건강 연구회,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 사랑방 등 국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주요 민간단체가 대거 참여하였다. 약 43쪽에 달하는 반박보고서(영문)는 정부보고서에 관한 일반적 평가, A규약을 실행하는데 어려움과 장애물, 노동3권, 산업 안전과 건강, 사회보장제도와 장애인, 여성의 권리, 교육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환경권 등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2면에서 계속)

이순심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

남편살해혐의로 기소된 이순심씨에게 1심에서 실형4년 선고되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는 피고의 불행한 가정생활등을 참작, 10년구형에서 실형4년으로 선고를 하였다.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는 이순심씨를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재판부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통해 "이순심씨는 가정폭력에 대해 사회의 무방비와 무관심이 낳은 가정폭력의 희생자이며 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아내구타는 더이상 가내내 문제가 아니

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피고가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정신질환등 일시적인 책임무능력상태에서 벌어졌을 여지가 많다"며 무죄주장을 해왔다.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는 이순심씨를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은 계속적인 재판방청과 모니터 활동을 벌여왔으며 전국에서 1만5천명의

(1면에서 계속)

권리의 핵심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A규약 위원들이 정부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약 60항이 넘는 질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인권단체는 정부가 A규약에 관한 1차보고서의 제출을 국내인권단체에 공개하지 않아 한동안 모르고 있었는데 민변의 국제연대실무간사 김은영씨가 지난 4월 뒤늦게 제네바에 있는 국제인권봉사회(ISHR)를 통해 정부보고서 영문판과 심의일정에 관한 일정을 입수하였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6월의 A규약 사전회의일정에 맞추어 약식보고서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올해 11월의 본 회의에 대비해 보다 충실하고 심층적인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다. 한편 서준식(인권운동 사랑방 대표)·권영길(업종회의 및 전노대 공동의장)·조용환(민변) 등 3인은 제안문에서 "A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구체적 실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인권단체들이 제공할 수 밖에 없으며... A규약에 관련된 우리의 인권상황을 국제법의 기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는 것은 우리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찾아내며 인권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90년 4월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이에 따라 B규약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92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민변과 한교협 인권위는 공동으로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2년 7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철폐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A, B규약에 관한 정부보고서는 1차보고서를 제출한 다음부터는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심의된다.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등의 활동을 해왔다.

시행령 개정없이 '벽지학교' 폐교 두밀분교 폐교철회소송

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운)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인지를 시정령상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시정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를 보고 결심을 하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하는 원고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9일 결심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두밀리 주민들은 지난 3월 21일 KBS의 '임제분석- 이것이 문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무계분교 그 후 7년'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했다. 이 테이프는 폐교정책이 이 농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농촌을 어떻게 황폐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판후 주민들은 서울고대에서 '참교육 학부모회', '또 하나의 문화' 등 단체회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1면에서 계속)

조심민족박해 규탄 작가회의·민예총 '민족문학작가회의'(대표 송기숙, 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공동대표 염무웅, 민예총)은 27일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본 지식인단체 '중심21'을 비롯하여 일본대사관, 한일의원연맹, 청와대, 외무부, 민주당등으로 보냈다. 작가회의등은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도전이며 법

죄"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또 "백주대낮에 소녀의 치마에 가위를 대고 린치를 가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덕성에 가위질을 해대는 원시적 야만행위"라고 규정하며 일본정부, 경찰, 언론은 이러한 야만적 행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즉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인의 조선인 소녀학대는 1백30여건에 이르며 심지어 지난 24일에는 14세의 소녀가 일본남자에게 발로 배를 차이는 등 심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다.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요구 문국진 모임 탄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 문국진모임)은 28일 오후2시 정부 제1청사 정부합동민원실에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 1천2백통을 접수시켰다. 이날 접수처에는 문국진, 김복영, 방양균, 강환용, 김종경씨의 가족등이 함께했다. 탄원서에서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조사 실시와 적극적인 치료대책 마련 △고문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 △고문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조속한 가입등을 촉구했다. 또한 문국진모임은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기로 정했다. 격월로 가질 1차 가족모임은 8월23일 오전11시 문국진모임 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때는 피해자 가족간의 정보교환과 고문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의 건강상담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796-8364).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있어서도 안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 그래야 과거와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오월광장 어머니' 기자회견 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복귀 전제해야

외래집단지료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보건관리에 초점을 두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생활환경의 변화등으로 이전보다 정신의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수용중심의 관리체계보다는 사회복지적 전제로 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 장애우연구소) 주최로 28일 열린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 토론회에서 김병후(인의협)씨는 정신질환자의 절대적 증가보다는 삶의 질을 높일려는

요구에 따라 정신의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정신질환자 입원 및 수용실태를 국가가 더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설치·운영' 조항(제8조)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결국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격리'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사회복지에서 항상 애기되는 예산타령을 없앨 수 있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단위의 정신보건관리가 강조되어야 하고 정신병원을 이용한 정신보건관리는 이를 보완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정신질환자를 외래집단지

료등 다양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따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과 정부의 정신보건정책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일반종합병원 등을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보건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의입원, 동의입원, 평가입원, 응급입원 등의 조항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지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보호자나 공무원 등의 편의에 따라 강제입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서는 85%이상의 정신질환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입원하게할 수 있다는 보고를 소개하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없애야하고 입·퇴원과정에서 치료효과와 정신질환자의 의지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또 정신보건분야에는 이미 폐쇄되어 있는 정신병원에서의 환자치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의 정신병원설립등을 중심으로 한 환자치료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시행착오를 겪은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에 규정된 '정신질환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조항등을 인용하며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에 포위되어 인간의 권리를 제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이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한 재할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집결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6월부터 매월 첫주 금요일 오후5시부터 '미군범죄 추방 캠페인'을 갖고 있다. 이태원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은 미군범죄 신고센터 소개, 미군범죄를 당했을 때 취해야할 행동, 그 피해에 의한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준다. 7월달 캠페인은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오후5시. 문의 744-1211

◆철도·지하철 파업관련 집회◆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비상총회

·일시 : 6월 30일 오후6시 / 장소 : 명동성당

□·일시 : 6월 30일 오후7시 / 장소 : 명동성당
·주최 : 철도·지하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대위

□·일시 : 6월 30일 오후6시 / 장소 : 인천대
·주최 : 인천지역노조대표자회의

□철도, 지하철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일시 : 7월1일 오후2시 / 장소 : 프레스센터

□·일시 : 7월 1일 오후5시 / 장소 : 탑골공원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집회보고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호재등, 정대협)는 29일 오전11시 외무부 유병우 아주국장을 만나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진상규명과 배상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영삼대통령앞으로 보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질 의서'를 전달했다.

정대협은 질의서에서 첫째, 진상규명에 있어 △92년 7월 정부 중간조사 발표 이후 진상조사에 진전어부 △정대협측이 총독부 문서와 면·리·군등에 남은 자료등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본정부의 1·2차 조사보고서에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명령체계, 최고책임자, 위안소 상황, 몇명의 여성이 끌려갔는지 등의 전체규모에 대한 것이 불충분한데, 92년 7월 정부 중간조사발표이후 진상조사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미공개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등을 물었다.

둘째, 배상문제에 있어 △민간배상청구권운동 지원에 관한 구체적 계획 △일본정부가 위안부 해결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아시아교류를 위한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기금안'에 대한 정부 입장 △정대협이 지난 2월7일 피해자 28인과 함께 일본검찰청에 일본군 위안부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일본검찰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거부했는데 한국정부는 '시효부적용협약'에 가입해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책임자처벌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외부부측은 이에 대한 답변서

를 7월 7일까지 정대협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한편 정대협 124차 수요시위가 「새세상을 여는 친구와 여성공동체」(대표 윤순녀) 주관으로 29일 낮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30여명의 참여로 열렸다. 경과

전국연합 “신공안통치중단·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언론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마련키로

전국연합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공권력 만능의 물리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와 재야세력을 볼모로 삼아 정권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하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야세력을 좌경으로 몰아 내는 등 전제군주에 대한 것이 불충분한데, 92년 7월 정부 중간조사발표이후 진상조사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일본정부가 보관하고 있다는 위안부문제와 관련된 미공개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등을 물었다.

전국연합은 또 △문민독재로 나아가고 있는 공안통치의 즉각 중단 △공권력을 남용한 내무·노동·교통장관 등 관련 책임자 사퇴 △노동자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였다. 한편 다음달 1일 전국 동시다발로 강력한 대정부 규탄집회를 갖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해 신문·방송사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노련은 29일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항의, 1만6천여 조합원을 대상으로 영장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언론노련은 또 언론사 노조위원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가 중심이 되어 각언론사를

보고에서 임정덕(정대협간사)씨는 “지난 10-24일 이호재공동대표, 김혜원실행위원, 황금주정신대할머니 3명이 미국을 방문,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저지등을 내용으로 워싱턴 등지를 순회하며 집회를 벌였고 여기에는 교포 1천여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또한 8월 15일경 중국에 사는 정신대할머니 9명 초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는 모임」(대표 신경하, 고난)이 매월 주최하는 월례기초회가 6월에는 조각간철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내용으로 30일 오후 7시 고난사무실에서 열렸다. 기동회는 지난해 9월 간첩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씨가 나와 사건경위를 설명할 예정이다.

철창에 갇힌 희망세에 실행선고

서울형사지법 2단독의 부구속 판사는 29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노래극을 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래극단 「희망세」 대표 김태일(27), 이윤정(23, 사무국장), 조재현(25, 연출기획담당), 이창렬(27, 기획부장)씨 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죄를 적용해 김태일씨에게 징역2년, 이윤정씨에게 징역1년6개월, 조재현·이창렬씨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상영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김씨등이 전국대학 순회공연등을 통해 북한의 혁명가요등을 소개하려 한 것은 단순한 북한 음악의 소개가 그치지 않음은 장본인은 정부”라며 “권영길, 양규현 전노대 공동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는 94년 임투와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을 사전에 제압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씨등은 지난해 3월 노래극단 「희망세」를 결성, 법원으로부터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은 오봉옥의 서사시 '붉은산 검은피'등을 올리고 이를 각색한 노래극 '아침은 빛나라'를 전국 각 대학 등에서 순회공연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인권하루소식

94년 7월

(제196호 - 제200호)

<이달의 주제-과거청산>

인권침해의 진정한 해결에는 역사적 재평가를 내리는 것과 함께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시정과 재발방지의 조치가 전제된다.

<'민변 토론회' 발제문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 금속, 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양규현, 전노협)은 "권영길, 양규현 전노대 공동의장에 대한 정권의 탄압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전노협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3자개입 금지조항이라는 녹슨 칼을 들이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행위"라고 주장하고 "가능한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통해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무력화시킬 것"을 밝혔다.

「철도·지하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29일 성명을 통해 "복수노조금지, 직권중재, 제3자개입금지 등 노동약법 개정, 3%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구속·연행자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등을 촉구했다.

한편 29일 호주의 「자동차, 식품, 금속, 기계노동조합」(AFMEU)은 「전국지하

철노동조합협의회」(상임의장 김연환) 앞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메시지를 전한다"는 전문을 보냈다. AFMEU는 "한국대통령과 기타 관계장관에게 정당한 정의행위로 구속되거나 노조지도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자유를 부정하는 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일본의 영당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내왔다.

구국전위관련 4명 추가구속

경찰청은 「구국전위」 사건과 관련 최영준(29,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회원), 최

은열(29, 제철화학 근무), 이봉근(31, 대성기업 근무) 씨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했다. 최영준씨와 이씨는 「구국전위」 중앙위원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재구(31, 구속중)씨와 서울경기지역 책임자 혐의를 받고 있는 박래군(32)씨의 권유로 「구국전위」에 가입한 혐의를, 최은열씨는 박씨와 함께 북한의 원전을 읽고 토론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중 최영준, 이봉근씨들은 지난 27일 밤 연행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3명의 구속자들

은 홍제동 대공분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1일 김진국(대동출판사 근무)씨가 「구국전위」 가입혐의로 안기부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한준수 전연기군수 2심에서도 유죄판결

대전지법 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최병학)는 30일 열린 한준수 전연기군수(6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주 국제인권소식은 쉽다.

▶ 인권 간행물 ◀

□여성의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주요내용 :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유형과 사례(정장자)/ 직장내 성희롱의 법률적 대책(이종걸)/ 직장내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위한 지침서 등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장애인의 인권, 어디까지?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요내용 : 정신보건정책과 인권(김병후)/ 각국 정신보건법과 인권(조홍식)/ 부록-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보건관리 향상을 위한 국제연합의 원칙, 정부안 정신보건법안과 수정안과의 비교 등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창립대회 자료집

·주요내용 : 경과보고, 회칙, 사업계획, 참가단체 주소록 등

□나눔터(94년 5월호)-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더 좋은 상담을 위하여-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지침서/성폭력특별법 이렇게 적용됩니다/재판관람기-서울대교 성희롱 사건 법정에서 등

◆ 행사 안내 ◆

□공안정국 조성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일시 : 7월 1일(금) 오후5시 / 장소 : 탑골공원
·주최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창립기념대회 및 출판기념회(☎ 523-8760*4)

·일시 : 7월 3일(일) 오후 2시30분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7세미나실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일시 : 7월 2일(토) 오후3시 /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인권하루소식」 6월분 총목차(175호-19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6/16	185	2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경기교육감 두달리 주민과 간담회/김상원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인권간행물
		1	대법관 임명때 인사청문회 마련해야, "자질과 능력을 국민이 판단하는 등의절차 필요", 민변 대법관 임명 토론회/희망과 연대의 시작", 17일 출국 오월광장 어머니 고별행사
6/17	186	1, 2, 3	안재구씨등 지하당 결성혐의 구속수사, 마산·창원에서 지하조직 결성혐의 6명 구속, 잠안재우기동 심각한 인권침해/지상중계-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대량구속,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한 무차별구속 연상", 민가협 목요일집회
6/18	187	1	대량구속, "정치상황 이유로 기본권 제한 우려", 엠네스티 혐의 명백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 요구, 한청협 "신공안정국 조성" 규탄/전해투, 해고자 복직노력 촉구/여민회 상담원교육 실시
		2	단체탐방 23 / 노동인권회관
6/21	188	1	한국인권단체 협의회 출범, 20일 9개 인권단체 참가, 인권침해범죄 처벌, 정보수집, 교육, 국제연대등 사업결의
		2	제일동포학생 인권피해 심각, 일본정부 무성의한 태도에 제일동포 분노/노동인권회관 소장 이·취임식 및 출판기념회, 22일 6시 30분 기독교회관/인권간행물
6/22	189	1	문국진씨 7개월만에 공판재개, '문국진 모임', 고문백서 발간, 피해자가족모임등 계획, "소송은 고문치료·예방·제도화 필요성 인식계기"/"원진기계 중국수출 반대" 기자회견/한진그룹해고노동자 면담요구, 연행돼 즉심판결/방사성폐기물 반대시위 집시법 위반혐의 구속
		2	전국철거민협의회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깎이고 있다"/"민정련 진보적 국제관계 교실, 6.22-7.16/출소장기수 보금자리 마련위한 하루주점, 25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94년 전국교육대회, 7.9, 엠네스티 한국지부/"학생을 폭력범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가협 대규모구속에 성명 첩도·지하철 파업 "정부의지에 달려있다", 지하철노조·전노대등 대책없는 강경대응보다 성실한 자세 필요, "전기협과 교섭창구 마련,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첩폐" 요구/재일교포 학생 폭행사건 방지 위한 대회, 24일 도쿄조선문화회관서
6/23	190	1	특수교육법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등 요구/부산지역 인권단체 협의체 구성 논의중/원진노동자의 삶 담은 원진이력서 2판발간 예정/고난모임
		2	23-24일 실무간사 수련회/발달장애아 행동수정 사례연구 발표회, 25일 1시 세브란스 병원/아시아교류센터 긴급안 반대, 123차 정대협 수요시위/기초촌 여성문제 교육, 미군범죄근절운동 여성인권위 전기협 사무실 경찰투입, 623명 연행, 전기협·지하철노조 실질교섭, 직권중재 첩회요구, '신공안정국' 업고 철도·지하철 파업물이 의혹/재판부, 고문행위이자 적시요구, 고문후유증 문국진씨 공판/언론의 남측론 폭력배 만들기 규탄, 민가협 목요일집회/한교협 인권위, 인권선교정책협의회, 27-28일 인권운동 실천방안 모색토론회도
6/24	191	1	국제인권소식-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주중심적인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전기협 비대위 성명-폭력적 공권력 침탈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시작한 철도노동자가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전노대 긴급성명-철도와 지하철의 파업을 유도한 정부의 음모를 규탄한다
		2, 3	중앙노동위 서울지하철에 직권중재 통고, 지하철노조 직권중재 거부, 전노대 27일부터 연대파업돌입 결의, 경찰의 전기협 노동자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고발
6/25	192	1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할 때, KNCC인권위원회 20주년 인권선교 정책협의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남녀고용평등법·근기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여성 평생평등 노동권과 직장내 성희롱' 공청회/"공권력 만능시대 회귀", 기사련·교회협 경찰난입 규탄
6/28	193	1	민주화 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요약)-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협의회
		2	A규약 약식반박보고서 공식접수, 27일 A규약 사무국, 공식심의문서 채택 11월 심층보고서 제출 예정, 사회권등 종합적인 인권상황 점검, 인권단체 연대활동 폭 넓혀/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구속영장 첩회등 요구
6/29	194	1	이순심씨 4년 선고, 방청인단 "정당방위, 정신질환등 참작 무죄"/시행령 개정없이 '벽지학교' 폐교, 두달리분교 폐교철폐소송/조선민주박해 규탄, 작가회의·민예총/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요구, 문국진 모임 탈원
		2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복귀 전제해야, 외래집단지료등 지역사회단위 정신보건관리에 초점두어야, 본인의사 반영 미흡으로 강제입원소지/매월 첫 금요일 미군범죄추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6/30	195	1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안 진상조사 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미국방문 집회 보고도/전국연합 "신공안정국중단·내무, 노동, 교통장관 퇴진", 언론노련 파업관련 언론보도 대책마련키로/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철창에 갇힌 희망세에 실행선교
		2	

「인권하루소식」 6월분 총목차(175호-195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6/1	175	1	정치·종교·법조·문화계등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인단 참여, 포스터제작등 초청추진위 막바지 작업 박차/여성상담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접근, 3일 '여성상담심포지움/민변 신입회장에 고영구 변호사/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2/3	'인권하루소식', 5월분 총목차(156호-174호)
6/2	176	1	"연대투쟁으로 임투승리, 민주노총 건설" 다짐, 전노대 결의대회 제3차 개입금지·구속수배에 공동대응 키로/ILLO 총회에 전노대 파견, 2명 고문단 자격으로/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2	김국홍·함세환노인 조건없는 송환요구, 1일 송환추진본부 가족편지도 공개/120차 정대협 수요시위/박장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공판 2일 열려/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 한국방문 일정
6/3	177	1	동티모르 독립을 지원하는 국제적 활동, 아시아태평양 동티모르 회의 필리핀의 불허방침에도 개최/한국인권협, 20일 창립/여성상담심포지움 마련, 3일 여성의 전화/고박장수열사 공판 열려, 23일 오전 10시 속행
		2	국제인권소식-아시아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 아시아 핫-라인 긴급호소, 스리랑카 4년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31명의 학생(학생 31명 유괴, 강제실종)
6/4	178	1	'대법관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 필요', 3일 '대법관 임명'에 대한 민변의 견해, '추천기구 통해 국민의견 반영해야/7일, 5월광장 어머니회 도착,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 /희망세, 북한 찬양·동조 인정, 징역2년 구형/8일은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2	'박래전 열사' 추모식, 6일 마석모란공원 참배/양심선언 전경 이우형씨 징역3년 집행유예 3년 선고//단체탐방 22-한국여성민우회 : 가정·일터·지역사회에서 평등세상 만들기 위한 촉매제 역할
6/8	179	1	죽어간 자녀들의 고통을 불행한 역사단절의 밑거름으로, 7일 '오월광장 어머니' 한국방문 기자회견 및 환영행사, "인권침해자 처벌 위한 국제연대활동의 연장선"/각계인사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촉구 청원
		2	"사형제도는 민주화 척도", 7일 예정총회 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촉구/자보노조 간부5명 세번재 무기한 단식선언/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죄결의등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인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혐의로 기소돼,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 심각한 훼손/8일 5월광장 어머니회 초청강연회, "고통받는 어머니들이 지구도처에 있다"
6/9	180	1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원진기계 중국수출반대, 20개단체 공동논의/문국진·김복영 생각하는 날, "고문피해자 보상" 서명/교육원칙 논쟁 일 듯, 8일 두달리분교 공판
		2	
6/10	181	1	한국-아르헨티나 고통받는 어머니들의 연대집회, 9일 민가협·오월광장 어머니 목요일집회, 공동선언 "인권침해 범죄자 처벌, 양심수 석방"
		2	고이래선 1주기 추모제, 10일 경기도 파주 시립묘지/고이한열씨 7주기 추모제, 9일 연세대학교정 /"자보노조에 지지와 연대를!", 8일 자보노조 위원장/단체간행물
6/11	182	1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토론회 "짜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원진기계 중국이전 반대 대책위, 구성/처우개선 요구 단식농성, 마산교도소 양심수
		2	병노련 의료제도 개혁요구 서명지 전달, 의보제도 개선·환자권리 존중등 요구/"미완성대본동 국가보안법 7조 저축" 희망세 2'3년 구형/통신망 통한 환경정보 전달, 환경운동연합, 내년 1월부터/백산서당 대표 긴급구속, 7년전 책까지 문제삼아/사노맹 조직책'에 2년 실행
6/14	183	1	5월광장 어머니, 광주희생자 가족과 경험 나누어, 12·13일 광주방문 광주학살책임자 고발장 접수에 동행도/민간장애인의 생활안정 위한 특별법 제정촉구, 장애인복지정책연구회 실태조사보고 결과 발표
		2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 기념대회/외국인노동자 수첩발간, 가톨릭 노동사목 협의회/고문방지협약 늦춰, 정기국회 비준신청 예정/사형 폐지자료집 발행, 예상 인권위 사형폐지분과
6/15	184	1	곳곳에서 '공안정국' 부활징후, 광주·대구·포항·마산 5개지역 20여명 일제히 연행,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등 인권침해 우려
		2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고문에 못이겨 허위자백했다", 총기철취 혐의 김벽창씨 공판/아들없는 5월광장어머니에 위로와 감사의 뜻 전달, 44년 옥살이 김선명씨
6/16	185	1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세 단원 3명에 유죄선고, "공권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안재구씨등 2명 구속, 한청협 성명 "포악한 매카시즘적 행위"

<이달의 주제-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 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3%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노동운동탄압규탄 5년만에 시국대책회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일 오후5시 탑골공원에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안정국 조성과 노동운동 탄압 규탄대회」를 통해 제야와 노동운동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영삼 정부의 정치적인 무능력과 부정비리로 인해 국민적 지지가 급속히 떨어지자 이를 폭력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해왔다」며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족의 대화해와 단결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물리적 탄압정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석자들은 또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가기를 포기하고 독재정치의 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내무·노동·교통장관 및 경찰청장 파면 △민주총을 건설하려는 전노대에 대한 탄압 중지 △변형근로제와 임금인상 3% 상한선 철폐 △구속·수배 노동자들의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벌이 기도 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오충일, 한교협)는 30일 오후 4시 기독교회관 7층 사무실에서 시국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26일의 기독교회관에 대한 경찰투입을 성소 유린, 선교자유 침해, 한국교회에 대한 도전행위로 공식 규정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기독교회관 침탈, 철도 지하철 사태의 전말을 밝히는 목회서신을 1만2천여 교회에 발송 △각 지역별 보고대회 개최 △대대적인 전국목회자 항의기도회 개최 △정부에 대한 항의방문단 구성 등을 결정했다.

또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공동의장 허명섭, 기사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 한교협 인권위)는 이날 오후7시 기독교회관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의 교회협 난입규탄과 철도지하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통대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김영삼정부의 반노동자적 정책에 있다」며 「정부는 노동자와 함께 국가경제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

의 교회협 유린에 대해 김대통령의 사과와 최형우 내무부장관 해임, 구속 노동자 즉각 석방, 그리고 실질협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련과 교회협 인권위원들은 26일 경찰진입이후 27일부터 목회자를 중심으로 기도회를 가져왔는데 7월1일 오전 11시부터 기도회 참석자 10여명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단식농성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4일 오전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교회협 사무국 전직원 17명은 29일부터 점심 1끼 금식과 점심기도회를 가지며 경찰난입에 항의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목사 20여명은 이날 나흘째 「공권력 난입 규탄 철야단식 기도회」를 가졌으며, 한교협 사무국 직원들도 이날부터 점심을 단식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국기도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민정권 마창지부 회원 박재홍씨등 2명 연행

민정권 마창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홍(29·전사무국장, 가명 오진오)씨와 성형제(법한금속해고자, 작년 사노맹 가입건으로 구속되었다 출소)씨가 지난 30일 각각 양산과 자취방에서 연행되었다. 30일 오전6시 창원 검찰청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연행된 성씨는 현재 마산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역시 같은날 오전9시 양산지역에서 연행, 마산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아·태지역 엠네스티 병행행사 확정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리는 「아·태지역 엠네스티 회의」 동안 「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가 주관하는 병행행사로 7월 29일 「양심수의 밤」, 30일 기자회견, 31일 「엠네스티의 밤」 등이 열린다. 또 31일에는 콜롬비아 대사관 앞에서 콜롬비아 정부군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적 살해에 항의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인다.

◆ 행사 안내 ◆

-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
 - 일시 : 7월 2일(토) 오후3시 / 장소 : 종묘공원
 - 주최 :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창립기념대회 및 출판기념회(☎ 523-8760)
 - 일시 : 7월 3일(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제7세미나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 서준식
*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 서준식

단체탐방 24 / 전국삼청교육동우회(구 전국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요 요즘처럼 맑은 하늘 보기 어렵고 모든것이 녹록하고 축축할 때는 이부자리까지 근질근질하여서 빨리 해가 나서 뜨거운 별에 바짝 말려 봤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같다.

그런데 여기 10여년이 넘도록 녹록한 음식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각종 불량배를 소탕하고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목아래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아닌 교육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다. 그간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해괴한 소문들은 많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것은 없고 언론도 흥미위주로 그 잔인성과 포악함을 다루었을 뿐 삼청교육대의 진상규명과 그 피해자들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자. '정의사회구현, 복지국가건설'이라는 구호가 적힌 불편을 학교매점에서 팔던 시절, 휴일 한때 TV를 점령하던 '배달의 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느날 한 젊은이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평소 일도 안하고 싸움질이나 하던 아들이 어느날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받게 된다. 머리를 딱딱 깎고 풍나무를 들어 올리고 앞드려 뺨쳐를 하는 아들의 머리위로 너희는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관의 간절하고 따뜻한 훈시가 이어지고 아들의 일 줄위엔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귀항하는 아들을 맞아 어머니를 비롯한 고향사람들이 두손을 흔들며 따뜻하게 맞아주는 배경속에 아들의 새삼의 각오가 독백으로 흐르는 것이 그 간단한 줄거리이다. 그러나 이 엉터리 이야기의 진짜 배경에는 5공체제 출범을 위한 발족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다.

초헌법적인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근과 경찰에 할당량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80년 8월 9일부터 4주간 기본문화교육으로 끌려간 3만 9천여명의 사람들 속에는 고교생, 술값실랑이를 한 회사원, 평소 경찰관과 감정이 안 좋았던 사람, 목

사, 교사, 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사회운동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잠을 자다가 길을 가다가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이들은 곡괭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배를 걷어 채이고 하는 속에서 4주를 보낸다. 그러나, 4주가 지나 귀가를 애타게 소망하던

'정의사회구현' 명목 아래 교육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들에게 '근로봉사'라는 명목의 자원서에 손도장을 찍는 것이 강요된다. 그래서 1/4이상의 사람들이 강제노역에 처해지게 되고 강제노역에서도 풀려나지 못한 사람들은 80년 12월 18일 '사회보호법'하에서 1-5년의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청송보호감호소에 보내진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문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도대체 이 계획이 실시된 배경은 무엇인가, 사망자의 숫자와 사망원인은 무엇인가, 건강한 젊은이가 갑자기 폐렴이나 복통으로 죽을수 있는 것인지, 사망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병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부상자의 숫자와 부상부위,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른바 '교육'이라는 이름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일상적인 폭력의 실상은 무엇인가,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조치라는 단계적 변화의 배경과 선별과정 및 그 기준은 무엇인가, 삼청교육대에 대한 '기록폐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진상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것은 주요 범법자들의 처단문제와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삼청교육동우회에서 보여주는 신문스크랩이 누렇게 뜨고 얼룩이 진 그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89년 광주문제와 분리되어 별도로 다루어지게 된 후 「삼청교육피해자 4천 54명 예상, 올해안에 모두 보상」이라는 발표문만 있을 뿐 어디에도 보상을 받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89년 '전국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가 만들어 지게 되었고 94년 5월에 사회단체로 등록하게 되었다. 사회단체로 등록하면서 그

간 지친 회원들의 결집력을 높이고 어려운 회원들에게 생활보조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삼청교육대에 대해서 최초로 91년 10월에 동우회 회원 96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현재는 312명이 재판계류중이다. 그러나 재판이 지지부진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언제 재

판이 끝나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을런지 막막하기만 한 실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1천9백90명의 이름으로 고발한 바 있고 청와대 면담요청과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일을 주로 해왔다. 동우회가 피해자신고를 받아 접수한 3천2백21명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교육중 사망자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397명, 상해자 2천7백68명, 행방자 4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어렵도 없다고 여기며 진상조사를 벌이고 싶으나 동우회의 재정조건과 인적사항으로는 어렵기만 한 일이다. 집회도 열고 집회 역을한 영혼에 대한 진혼제도 마련하고 싶고 부상자를 돌보고도 싶지만, 회원들 자신이 후유증으로 가족에게 버림받았거나(회원의 70-80%에 달한다고 함), 생활능력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이곳저곳에 면담을 요청하고 뛰어다닐 뿐이다.

그러나, 어디에 가든 '계류중이니 기다려라, 보상법이 처리되면 어떻게 해보겠다'하는 식으로 소관부처간에 떠넘길 뿐이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광주문제와는 다르게 사회적 관심이 적고 오히려 '전과자'라고 매도하거나 과거를 들쭉신다는 냉담한 반응에 동우회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다. 이들이 이문제의 해결을 감떨어져라하고 기다리기는 더이상 힘든 일인 것 같다. 어느때보다 과거청산의 문제를 높이 부르짚는 지금,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관심이 찬란한 햇살일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시대의 숙제를 푸는 일일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약법>
제3자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비전향이유로 종교활동·청원권 제한

광주·대구·안동교도소 "처우개선요구 청원에 이감조치로 대응"

재소자에게 보장된 청원의 권리가 제한되고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등 교도소 수감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다.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인 강용주(33, 10년복역)씨는 지난 6월 25일 대구교도소에서 수감중 밀정한 재소자를 병사에 수용하여 감염의 위험에 놓인 실태의 부당함과 썩은 과일등의 구매물품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청원을 하였다. 당시 이순익 대구교도소장(현 서울구치소장)은 이 청원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전달하는 대신 강씨와 면담을 통해 구매 및 검수관계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조치를 취하고 6월 27일까지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것등을 약속했으나 강씨는 27일 안동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강씨는 이감에 대해 "청원권을 막아 교도소내의 비리를 은폐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감된 안동교도소측은 '비전향수'인 강씨와 일반 재소자와의 격리를 이유로 기독교인인 강씨에게 종교 집회 참가, 주1회 시청할 수 있는 VTR시청 등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6월 24일 광주교

도소에서 대구교도소로 이감된 박동운(14년 복역)씨는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사건이 조작되어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 청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

감후 대구교도소 징벌방에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측은 이에 대해 "입소초기에 징벌방에 수용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행형법 제6조는 "수형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동의장 권영길등, 전노대)는 2일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남용과 노동운동탄압 규탄대회」를 열었다.

전노대는 결의문을 통하여 "노동약법 철폐에 대한 대중적 요구에 기초해서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공무원에 대한 단체행동금지, 복수노조 금지 등 노동약법 개정투쟁을 강도높게 전개할 것"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지하철노조의 지도부가 농성하고 있는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에는 전국 노점상연합회와 최근 결성된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빈민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이날 서울 이외에도 부산, 경기남부, 대구 등에서 집회가 열렸다.

전노대는 이날 집회를 시발로 노경총 합의, 공기업 3%임금이이드라인 등 임금제정책 철회와 노동약법 개정, 구속자 석방·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전국적 연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서준식)은 이날 집회를 시발로 노경총 합의, 공기업 3%임금이이드라인 등 임금제정책 철회와 노동약법 개정, 구속자 석방·수배해제를 요구하는 전국적 연대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이제 쏟아 놓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에 하고 싶은 말씀.

2백호 특집원고 모집

지난해 8월4일 준비1호로 여러분을 찾아간 <인권하루소식>! 7월7일 지령2백호를 맞아 **미사여구가 아닌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합니다.**

원고내용 : 편집, 부족한 점, 기사의 범위, 정확성등 원고마감 : 7월 6일 오전12시

인권운동사랑방 12차 월례세미나

북한 인권문제, '양날의 칼'인가?

-북한 벌목공을 통해 생각해보는 인권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 할 인권이 정치인과 언론에 의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북한 벌목공사건, 시베리아 현지에서 취재활동을 편 양상우 기자의 생생한 취재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인권운동이 남북한의 인권상황개선과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토론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 : 양상우(한겨레신문 기자, 시베리아 현지에서 북한 벌목공문제 취재)

일시 : 7월 8일 (금)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고엽제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

3일 오후6시50분께 춘천군 신북면 경춘공원묘원열매사육장 부속사에서 임영재(56)씨가 흉기로 왼쪽무릎위 허벅지부분에 3cm가량 상처를 내고 숨져있는 것을 묘지관리인 조아무개씨(3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임씨의 시체 옆에 길이 12cm의 흉기가 놓여있고 반향한 흔적이거나 다른 의상이 없는데다 월남전 참전자로 고엽제후유증 증상인 경련과 하반신마비증상이 자주 있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스스로 상처를 내 마비증세를 풀려다가 동맥이 끊겨심한 출혈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

임씨의 부인에 따르면 "남편이 지난 65년 맹호부대 하사관으로 2년간 월남전에 참가했으며 70년 결혼후 불면증 경련 호흡곤란 등 고엽제후유증을 앓아왔다"며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반대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전11

시께 고엽제후유증을 앓아오던 임경옥(50)씨가 한때 자신이 살았던 춘천군 사북면 빈집에서 고엽제후유증을 비판, 극약을 먹고 자살했다.

검찰, 고문혐의 안기부원 무혐의 처분 "혐의사실 부인, 고문입증 증거 없다"

서울지검 형사3부가 지난달 30일 민중미술가 차일환(35)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소된 김군성, 이인회씨 등 안기부 수사관 6명에 대해 김씨등이 자신의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고문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민중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과 관련,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잠을 자지 못한 채 구타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8일 김씨등 6명을 고소했다.

(1면에서 계속)

원장 권영길, 언노련)은 4일 권영길 언노련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

언노련은 항의서한에서 "권 위원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제화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권위원장과 전노협 양규현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A규약 반박보고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

일시 : 7월 5일 10시

장소 : 기독교백주년 기념관 2층 그릴

순서 : 반박보고서 공동작성 취지 및 경과/요약반박보고서 제출과 A규약 사전실무회의 참석결과 보고

문의 : 522-7284

탈냉전이후 환경, 인구이동, 다자간 군사안보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편집주 : 지난 6월 22-25일까지 성균관대에서 민중정치연합 국제국 주최로 "제1기 진보적 국제관계교실"이 진행되었다. 이 교실은 국제화의 의미는 무엇인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3일 김세걸(서강대 강사)씨의 강좌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7월 11-16일에 강의가 이어진 예정).

근대적 국제관계는 국민국가들들 전체로 하여 성립, 발전해왔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특징이며, 민족에 대한 정의는 핵심적인 개념중의 하나이다. 오늘날의 국가는 단일민족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이다. 근대국민국가는 '국가정체(Nation-identity)' 형성을 바탕으로 하며 스위스는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오늘날의 국가는 다민족국가이며 내부적인 소수민족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각 국가의 목표는 '국익의 추구'인데 맑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이익이란 자본주의 제급의 이익을 말한다. 냉전시대의 국가이익은 이념, 안보의 중요성으로 집약되었지만 탈냉전이후 국익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왔다. 탈냉전시대에 군사력의 효용성은 많이 삭감되었으며 지식, 기술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의 개념도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되었으며 환경문제, 국제범죄, 인구이동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국제정치학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현실주의 중심에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정책에서 보여진 사고의 전환으로 포괄적 안보로서의 접근(경제, 환경, 다자간 군사안보등)으로 일국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제기되었다.

현실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이종의 불평등 조약으로 기성의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구분하여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핵확산을 막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수평적인 핵보유국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며 이 조약의 체제유지는 미국이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관건으로 군사적 특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공 판 안 내 ◆

□7월 5일(화)
·김태홍의 2인, 국가보안법, 10시, 418호, 선교

□7월 6일(수)
·고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공판, 2시, 565호
·조계은, 국가보안법, 10시, 311호, 선교
·백형록, 국가보안법, 4시, 321호, 3회

□7월 8일(금)
·정강용,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11시, 대전고법 301호, 3회
·이정임, 국가보안법, 2시, 311호, 2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1호, 1회
·신학철, 국가보안법, 4시, 422호, 속행
·정용화, 업무방해등, 10시, 422호, 속행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노동악보>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새대법관 "인사청문회 통해 검증하라"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8일 민주당, 민변 등 공청회 대법관 임명제청자 개별평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5일 '새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한 논평'을 통해 "제청절차와 시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강조하였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의 활동에 주목할 것"임을 밝혔다.

민변은 논평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각계의 대표의 참여가 개방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윤대법원장의 비공식적인 의견수렴은 한 밀형적인 의견수렴은 크게 미흡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변은 또 "임

기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이루어진 후임대법관의 임명제청시기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국회의 동의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개최논의를 봉쇄내지 회피하려는 의도와 관련된 것이라면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변은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그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국회는 직시하여야 한다"며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민변, 한교협 인권위 등은 7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일본정부 후속조치에 관여안해 정부 위안부대책

외무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6월 29일 제출한 위안부 관련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일 보내왔다. 답변서에 의하면 정부는 진상규명에 있어 일본정부에 대해 물질적 보상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오재식(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이상일(숭실대 교수), 성경용(한림대 교수), 이내영(아시아문제연구원), 박병규(의환은행 조사부), 정태인(조선대 강사), 차상우(국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본지 제195호 참조).

이제 쏟아 놓으십시오

<인권하루소식>에 하고 싶은 말을.

2백호 특집원고 모집

지난해 8월4일 준비1호로 여러분을 찾아가던 <인권하루소식>! 7월7일 지령2백호를 맞아 **미사여구가 아닌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합니다.**

원고내용 : 편집, 부족한 점, 기사의 범위, 정확성 등
원고마감 : 7월 6일 오전12시

'APEC 서울회의', '사회발견 정상회담' 대비 민간단체 모임

8일 기사연 기장선교교육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원장 박상승, 기사연)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민간단체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 아시아 민중' 등의 주제로 8일 오전 12시부터 3시간 30분 가량 기장 선교교육원에서 모임을 갖는다. 주제발표 외에도 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사회발견에 대한 유엔정상회담'을 위한 국제연대활동 보고 및 논의와 8월 열릴 'APEC 서울회의', '코펜하겐 대회' 준비와 계획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는 오재식(크리스찬 아카데미 사회교육원장), 이상일(숭실대 교수), 성경용(한림대 교수), 이내영(아시아문제연구원), 박병규(의환은행 조사부), 정태인(조선대 강사), 차상우(국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313-3319).

미군 영동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5일 미대사관에 진정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가족들과 동네주민들이 무차별 학살됐다고 주장하는 「충북 영동 미군양민학살사건 대책위」 위원장 정은용씨(71)등 대표 5명은 5일 오후 1시30분 미대사관을 방문, 당시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미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한국전이 한창이던 지난 50년 7월26일부터 4일간 미군들이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피난민으로 가장한 인민군들이 있다'며 전투기와 기관총 등을 무차별학살했다"고 밝

광주전남연합 소속 오병윤씨등 3명 구속 5일 범민련 관련

5일 오전 8시30분에서 오전 10시 사이 범민련 창립대회 참석등과 관련 오병윤(38,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사무처장, 광주전남 노동운동단체연합 의장 겸임)씨등 3명이 연달아 연행되었다. 오씨 외에도 김세원(67, 광주민족자평화통일 중앙회의 의장)씨와 김양무(42,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위원장)씨가 긴급구속장을 발부받은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연행되어 현재 광주 남부경찰서 보안수사대에서 조사중이다.

오씨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해 강령채택등 대회를 주도하고 남측원 핵심간부를 배후조정한 혐의등을 공동적으로 받고 있다. 이중 오씨는 기관지 '전쟁과 평화' 등 유인물 제작, 92년 고려연방제 찬양 및 북한찬양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연행하면서 광주지역 범민련 광주지부 사무실과 노동운동단체연합 사무실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건과 컴퓨터 등 집기 수백점을 압수했다. 한편 오후2시 광주전남연합은 비상집행위를 소집하고 "정부는 걸으로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통일을 선도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조국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이윤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광주전남연합과 노동운동단체연합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은 뒤, 항의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바로 잡습니다

본고 197호 1면 '아태지역 엠네스티 병행행사 확정' 기사중 병행행사 '양심수의 밤'이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며, 아태지역 엠네스티회의 본행사는 종각 YMCA호텔에서 열리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일 시 : 7월 7일(목) 오전 8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공청회 주제발표

- 1)대법원의 구성과 역할, 대법관 임명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법학교수협의회
- 2)대법관 제청자들에 대한 개별평가 및 진단, 향후의 개선방향-민변
- 3)대법관 제청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

주 관 : 민주당
참가단체 : 민변, 경실련 시민법위, 한교협 인권위, 법학교수협의회등
문 의 : 522-7284

를 주도하고 남측원 핵심간부를 배후조정한 혐의등을 공동적으로 받고 있다. 이중 오씨는 기관지 '전쟁과 평화' 등 유인물 제작, 92년 고려연방제 찬양 및 북한찬양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연행하면서 광주지역 범민련 광주지부 사무실과 노동운동단체연합 사무실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여 각종 문건과 컴퓨터 등 집기 수백점을 압수했다.

한편 오후2시 광주전남연합은 비상집행위를 소집하고 "정부는 걸으로는 남북한 정상회담으로 통일을 선도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조국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이윤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광주전남연합과 노동운동단체연합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은 뒤, 항의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중징계 반대"

「서울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김연환)는 5일 용답동 군사차량기지내 후생관을

에서 조합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철회와 징계유예 분쇄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갖고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중양노동위원회의 일방적인 직권중재 재정은 무효"라고 강조하고 "정부와 공사측이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는 등 노조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을 경우 재파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26만4천4백20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5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 인상된 월26만4천4백20원(시급기준 1천1백7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올 9월부터 1년간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통일맞이 칠천만 겨레모임' 이사했습니다.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B/D 102호
전화 : 313-8201
팩스 : 362-4632

◆ 행사 안내 ◆

□ 철도-지하철 노동자 수계법회

·일시 : 7월 6일 10시 30분
·장소 : 조계사(지하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하차)
·문의 : 732-0239

□ 두밀분교 후원회 첫번째 모임

·일시 : 7월 6일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
·행사 : 두밀분교 탐방, 두밀리 어린이들과 함께 걷기, 두밀리 주민과의 대화, 점심간식(참가비 3천원)
·주최 : 두밀분교 후원회(☎ 0356-82-8615)

□재일동포 인권탄압 규탄 수요시위

·일시 : 7월 6일 12시-오후 1시30분
·장소 : 일본대사관-탑골공원
·주최 : 정대협,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등
·문의 : 263-2802, 364-7782

<이달의 주제 - 노동악법>
제3차개입금지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따라서 철폐되어야 한다.
<94년 국제노동기구 권고내용중>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심보선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151개국 국기별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93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각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94년 연례보고서에는 세계 1백51개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가별로 적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인권운동가들이 각국 정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는 더욱 증가했다"고 논평했다.

1백51개국에 대한 조사작업 결과 93년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고, 10만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1백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보고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

이상의 수인이 사형집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통해 유엔에 약 9년만에 인권수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서 작성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해 2백50여명의 정치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문도중 고문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뒤 구금되었다. 또한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양심수 석방, 고문과 가혹행위 중단, 모든 고문 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형집행 중지와 함께 정치적 수인을 구

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 정치수인의 사형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북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앰네스티의 독립적인 조사단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작업이나 감시, 구금장소의 방문을 위해 개방할 것을 촉구

16개 단체 두밀분교 후원회 모임 서울교대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키로

「참교육시민모임」, 「또하나의 문화」, 「인권운동 사랑방」등 16개 단체가 참여한 두밀분교 후원회 첫 번째 모임이 6일 오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과 농활은 경원대 학생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비가 오는 속에서 진행된 행사는 두밀분교 탐방, 마을잔치 등으로 마련되었고 오후 3시에는 마을회관 2층에서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호용수(「또하나의 문화」동인)씨는 "폐교의 이유중에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3복식 수업이 이뤄지는 두밀분교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사고를 전환시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호순(마을주민)씨는 복식수업으로 7-8명의 학생들을 교사 1명이 가르치는

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복한의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나 재판과정없이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구금되어온 양심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고 전했다. 이들 양심수중에는 반체제 인사의 친척이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백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구금센터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이전 수인의 진술에 의하면 구금조건은 열악하며 수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상례화되어 있고, 사형집행이 있으며 일부는 공개집행도 있었다고 전했다.

것과 단식수업으로 많은 수의 학생을 교사 1명이 가르치는 차이를 들었다. 또한 "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두밀리 아이들이 도심지 아이들보다 불리한 상황이다. 아이들이 도시에서 느낄 소외감등 정서적 면과 통학으로 인한 불편,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악영향으로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교육청과 가평읍사무소에서 도 참석했는데 읍사무소 총무계장은 회의도중 "16개 단체나 되는 사람들을 누가 동원했느냐"는 질문을 던져 야유를 받기도 했다. 한편 서울교대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보충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하나의 문화」를 중심으로 두밀분교 폐교반대에 관한 심포지움을 폐교철폐소송 결심공판전에 열 예정이다. 결심공판은 19일이다.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영역별로 기사의 정확화 필요 인권침해 국제적 대응에 참여도

오만호 AI 한국지부 사무국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들 대표하여 「인권하루소식」 2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느덧 아침이면 가장 먼저 '하루소식'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내에서 인권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며, 시기별 중요 인권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촉발시키는 '하루소식'의 역할은 이 시대에서 인권 인식과 인권활동을 위한 선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이 평소 제가 느끼고 있는 몇가지 점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매일 매일 발행되는 「인권하루소식」에서 일정한 영역의 영역이 체계적으로 분류되고 영역별로 정형화된 형식을 통한 기사화를 희망해 보고자 합니다.

인권단체의 활동 및 동향, 국제인권뉴스, 노동권, 인권교육, 양심수, 사형제도, 고문, 사법제도문제, 장애인 권리, 이전 인권침해에 대한 처

대법관 제청자에 대한 긴급 국민공청회

-대법원의 역할과 제청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일시 : 7월 7일(목) 오전 8시
장소 :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1)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 - 정종섭 건대교수
- 2)이번 대법관 제청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심규철 변호사
- 3)대법관 제청자에 관한 정당의 입장 - 이철 국회의원

토론참석자 : 정태윤 경실련 정책실장, 권오현 민가협 공동대표, 김경남 한교협 인권위 사무국장

리문제 등을 일정 정도의 형식안에서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저는 폭넓게 다루어지는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이 다루어야 할 인권주제와 영역의 설정은 현시점의 중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려속에서 차분히 설정되고 전문적 조사를 통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인권정보교환, 인권침해상황에 대한 보도, 인권교육의 3가지 기능을 설정된 인권영역별로 편집 보도하는 노력이 더욱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째, 「인권하루소식」이 하루하루의 소식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임의적인 편집과 보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설정된 기사 포맷에 보도내용을 맞추어 편집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하루소식」에 제안할 사항은 저희 국제앰네스티가 매일 전개하고 애쓴 긴급구명활동(Urgent Action)을 인권하루소식에서 매일 간략히 한 사례를 다루어 줌으로써 각국의 인권침해사태를 신속히 소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대응체계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인권운동은 멀고도 지루하지만 「인권하루소식」이 추구하고 있는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발행을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용기는 한국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권하루소식」 2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독자들과 내용있는 대화방식 모색 정보흐름의 일방성을 극복하길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쉽게 중도하차하지 않고 지령 200호를 기념하게 된 「인권하루소식」(이하 「소식」)에 축하를 드립니다.

주체적 조건탄산과 치밀한 준비없이 객관적 필요성과 그럴듯한 기획만을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가 뒷

감당을 못하고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예가 흔한 것을 감안한다면, 「소식」이 보여준 지속성과 책임성에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팩스신문이 지닌 속보성으로 인해 얻는 도움도 도움이거니와, 자칫 잡다한 정보의 홍수속에서 파묻혀 빛이 바래기 쉬운 사건, 소식, 해설들이 인권이란 관점에서 수집, 재배치되어 되어 전달되므로써 여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보의 소통만이 아니라 노동·여성·환경·교육·법률·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제 쟁점과 파제가 일정한 관점으로 소개됨으로써 인권운동의 대상과 영역에 대한 본질적 인식에도 기여해 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각종 집회, 세미나, 자료소식도 좋고요. 단체탐방기사도 여러모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시야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200호를 넘기게 되는 시점임을 고려한다면 그간 확보된 독자들과의 내용있는 대화방식을 모색해감으로써 정보흐름의 일방성을 서서히 극복하고 함께 만들고 운동을 생산하는 신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계속 건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현장의 인권침해 등 취재 확장 '법률지식'란도 마련했으면

김진권 서울대 교수

그동안 인권운동 사랑방이 피땀 흘려 헌신해온 사업을 높이 경하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운동, 평화운동, 군축운동, 반핵운동 등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방'은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단지 피해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권운을 신장시키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을 알게 합니다.

힘이 닿는대로 취재대상범위(어린이 교육현장의 인권문제까지...)도 넓히고 소식을 빨리 알리기도 해야겠지요. 인권에 관련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흔히 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가장 빈번히 문제되는 '법률지식'을 알려주는(상식적 법률해설)란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노동현장에 많이 와 있습니다. 기본권 신장의 차원에서 이들의 처지도 다루어주면 좋겠습니다.

재판을 모니터하여 색인작업화 판사 재판성향 분석 지침역할을

박성호 변호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이목을 끌 수 있고 시작부터 현란무쌍한 것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짧은 시간과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사회적 지명도나 유명세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 아니겠는가 싶다. 자본주의적인 홍보논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보면 이러한 흐름은 더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마련이다.

그러나 훗날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인간 삶의 조건들을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업적들을 상고해 보면, 단언컨대 시작부터 여론의 각광을 받고 짧은 시간내에 단판승부식으로 일의 결말이 매듭지워졌던 경우는 없다.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질 때 한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는 치유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권하루소식」의 제200호 발행은 문제제기의 출발과 그 지속성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인권문제의 최전선에서 열악한 무기체제와 충분치 못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인권운동 사랑방의 노고에 머리숙여 존경을 표한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인권하루소식」의 애독자로서 몇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간 「인권하루소식」의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사실 보도 및 이와 관련된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를 게재하는 한편, 일정기간 단위로 이들 기사에 대한 색인을 게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애독자들을 위한 자료추적과 자료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색인작성작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시켰으면 한다. 가령 「인권하루소식」은 재판을 모니터하는 역할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재판내용은 물론이고 재판장과 주심판사의 이름을 명기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모니터된 재판결과만을 별도로 색인작업화함으로써 특정판사가 승진되거나 승진불망에 오를 때 해당판사의 재판성향을 신속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침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아울러 어린이와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축적하여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주었으면 한다.

신문에 안난 '소식'지 특종들

김 당 「시사저널」 기자

아마도 나는 「인권하루소식」을 가장 열심히 읽는 기자 독자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그것은 '소식'이 내게 정례적으로 요긴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사주간지로서는 가장 많은 인력을 갖고 있지만, 인력 구조나 취재 환경의 여건상 정부 부처를 고정적으로 출입하면서 취재할 수가 없는 우리 형편에서 '소식'은 여러 통의 전화결과 발로 뛰는 수고를 대신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알다시피,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이른바 출입처 및 출입기자단 제도는 '전국을 커버'하는 종합 일간지(또는 방송·통신)의 기자로서 '상시 출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불문율에 근거하고 있다. 전국 네트워크를 갖지 못하거나 날마다 기자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지방송이나 교방송 그리고 口일보 기자들이 출입은 하지만 출입기자단에는 끼지 못하는 것도 그런 연유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와 언론사의 '공생 관계'와 약속은 머지 않아 깨질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같은 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이기 때문이다(서준식 선배가 보면 "왜 그런 불공정과 위헌성을 고치려 들지 않고 세월의 흐름에 맡기느냐"고 질책하겠지만 머지 않아 그 일을 착수할 것임을 밝혀둔다).

어쨌건 나는 '소식'의 일단짜리 공판 안내기사에서부터 불처벌의 문제를 다룬 기획 기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로부터 많은 수고를 덜고 있다. 또 창간전의 전대미문의 유서대필 사건에서부터 두밀분교 폐교사태에 이르기까지, 내가 보도했던 많은 기사의 아이템 선정과 그 취재에서 '소식'지의 발행인과 편집인 그리고

「인권하루소식」 제200호를 발행하기까지 여러 모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기대와 질책을 소중히 여겨 더욱 발전하는 「인권하루소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인권하루소식」 편집진 일동

'사랑방'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소식을 전한 많은 소중한 '특종 거리'를 게을림과 무관심으로 놓치고 있다. 최형우 내무장관의 '고문 용인' 발언과 경찰의 장애인 폭행사건과 최근 정부가 A규약을 몰래 체결한 것 등에 이르기까지. 고백하건대 '낙종'의 첫째 이유는 게을름 때문이지만 둘째는 인권뿐만 아니라 환경·국방까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회를 개인적 바람을 전한다면 '소식'이 단발성 인권침해 고발기사보다는 '기획 기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이성의 사회, 인권보장을 외치는 '소식'활동가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반인권적 상황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참새상이 왔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 내게는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부지런함, 그리고 구독료 납부라는 의무만 남은 셈이다.

단순한 문제제기보다 해결방안의 모색 및 사실이 게재되었으면

이승철 민족문학작가의회의 사무국장

소위 '문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인권하루소식」의 지면은 날이 갈수록 수많은 '반인권적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날이 늘어나는 정보량을 적은 지면으로 다 채우지 못하고, 선별해 게재하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인권하루소식」은 신문에 다 보도된 사례의 이면에 숨은 이야기의 발굴을 통해 인권운동의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아울러 단순한 문제제기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해결의 모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면을 대폭 늘리고(재정부담이 크겠지만 적어도 4쪽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날의 소식중 중요한 것은 「인권하루소식」 자신의 입장이 게재된 '사설'이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된 인권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따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으로까지 승화되었으면 한다.

<색인순서>

269 / 인권일반

270 / 인권단체 - <인권협> <민가협> <유가협> <민변> <민주법연> <KNCC인권위> <인권운동사랑방> <불교인권위> <고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대협>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민우회> <지탁연> <문국진모임> <삼청교육대>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5.18계승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277 / 법제 / 사형제도 / 고소고발 / 손해배상청구소송

278 / 고문·가혹수사, 경찰폭력 / 의문사 / 김기웅씨사건

279 / 국가보안법 - <국보법일반> <노태훈씨사건> <방북사건, 황석영씨사건> <사과원> <김삼석씨 남매사건> <민정련> <혁사노> <사노맹> <PC통신> <희망새> <출판> <구국전위>

281 / 불처벌 / 5월광장어머니회 / 정신대

283 / 양심수 / 장기수

284 / 양심선언 / 주한미군·윤금이사건

285 / 두밀분교 / 전교조

285 / 노동일반 / 산재·원진레이온 / 전해투 / 외국인노동자 / 지하철·철도파업 / 한국자보

288 / 장애인(일반/취업/접근권/교육) / 노인 / 아동

288 / 여성일반 / 아내구타 / 이순심씨사건 / 성희롱·성폭력

290 / 북한인권

291 / 국제 - <국제일반> <유엔인권위> <인권고등판무관> <동티모르> <국제앰네스티> <여성> <아태지역인권위크샵> <사회발전정상회담> <아시아워치>

293 / 인권정기간행물 색인

<범례>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94.2.18 / 45

; (94년 2월 18일자 기사, 『<인권하루소식> 합본 II』의 45쪽)

인권일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94.2.18 / 45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인권유린 등 다룰 방침/94.2.18 / 45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명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94.2.22 / 51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심포지움/94.2.25 / 59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돕읍시다/94.3.2 / 65

·아시아 선교대회 서울에서 열려, 4월 25일-5월 2일/94.3.3 / 71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94.3.19 / 98